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5 ~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5~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5~2016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연구관리본부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호정씨앤피(02-2277-4718)
인 쇄 처 호정씨앤피

ISBN 978-89-8479-833-5 93340
남북 관계[南北關係], 남북 통일[南北統一]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6003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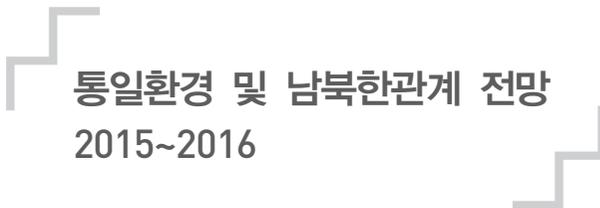
가 격 8,000원

©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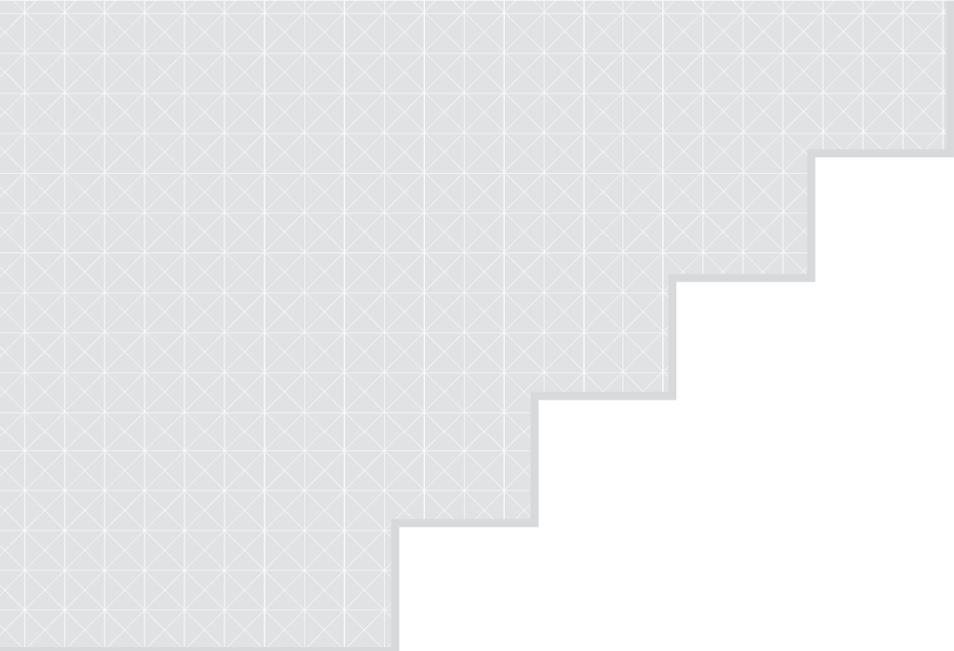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5~2016

CONTENTS

I. 동북아정세	1
1. 동북아 정세	3
2. 북핵문제	29
II. 북한정세	35
1. 정치동향	37
2. 경제동향	45
3. 사회동향	50
4. 군사동향	55
5. 대외동향	62
6. 대남동향	69
III. 남북한관계	75
1. 남북대화	77
2. 남북 교류협력	87
IV.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97
1. 북한인권문제	99
2. 대북지원	106
3. 북한이탈주민문제	111
4. 이산가족문제	116
부록	121



I

동북아정세



1. 동북아 정세

가. 동북아 질서

(1) 2015년 정세

(가) 동북아 갈등 구도의 심화

현재 국제질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지속, 유럽의 위기, 중국의 지속적 부상 등으로 미국 주도체제에서 미중 양극체제로 점진적으로 진전 중이다. 동북아 지역 질서에도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공세적 부상은 지속되었고,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러시아의 대중 협력 역시도 강화되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동맹체제 강화 노력을 지속시켰고, 이에 편승한 일본은 보수 우경화 노선을 강화하면서 지역 내 갈등을 유발시켰다. 미중 간의 대립구도는 2015년에 보다 명확해졌다. 미국은 서방국가들과 연합하여 대러 경제제재를 추진하였고, APEC, ARF, EAS 등 지역다자체제 중시,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였다. 특히 TPP 본격 출범과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 형성을 제어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다자체제 참여, 우호적 주변국 정책, AIB, RCEP 협상 등으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였고,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본격화함으로써 돌파구를 모색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동북아 지역 질서는 미(일) 대 중(러)라는 대립구도를 점차 공고화되었고, 상호 간 잠재적 갈등이 보다 본격화되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듯이,

양국이 역내 영향력을 두고 상호 견제하고, 특히 남중국해, 사이버 안보 문제 등에서 첨예한 이익 갈등을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외환과 무역, 북핵(미사일) 대응 등에 대한 협력을 강조한 것 등을 볼 때, 갈등적 지역질서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공간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나) 2015년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미(일) 대 중(러)의 대립이라는 지역질서의 갈등 구조는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2015년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는 한국정부를 상당한 시험에 들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우선, 올해 초 중국 외교 당국자들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직접적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의 사드 반대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다음으로 AIB 가입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과정에서 미국 조야의 한국의 대중 경사론이 확산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의심을 받아야 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중국과 갈등 중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전반적인 지역갈등구조의 심화 속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양단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운명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미국, 중국 모두와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균형외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8·25 합의를 통한 남북 긴장 완화,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 등은 우리의 동북아 역내 평화협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동북아 지역의 근본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겠지만, 한

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는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2) 2016년 전망

2016년에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일) 대 중(러)의 갈등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2015년과 마찬가지로 대외전략의 기조를 중동에서 IS 격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 견제를 주요 목표로 삼을 것이다. 다만 1월부터 돌입하게 되는 선거 일정으로 인해 IS 격퇴를 위한 지상군 파병 등의 위험 부담이 큰 새로운 대외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기존 아시아 재균형 정책 및 동맹 강화 추진을 통해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대 등에 대한 안보적 견제를 지속시킬 것이고, TPP의 본격적 추진 등을 통해 아태지역 경제질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더구나 신년 초 발생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국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동시에 대북 역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사드 배치, 한일 관계의 적극 개선, 더 나아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반부패 운동 등 내부 혁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과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구상을 중심으로 경제영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경제 역량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강경하고 급진적인 대외정책 구사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비하여, 기존의 노선 즉, 대러협력 강화, 한중협력 확대, 대일관계 개선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지

만,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갈등보다는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려 노력할 것이다. 물론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남중국해 등 영토 영역 부문에서 미국 및 주변국과의 마찰은 지속될 것이지만, 직접적인 군사충돌까지 가는 갈등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려 노력할 것이고,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압박, 일본 우경화 및 역사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 등 적극적인 한국 견인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2015년 류원산 상무위원의 방북 이벤트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예방적 관리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된 바, 중국은 당분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말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미국이 구상해온 한일 협력에 바탕을 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구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적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 등 과거사 및 영토 관련 잠재적 갈등요인이 산재해 있어 한일 갈등 나아가 한·중·일 갈등의 재점화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15년 어렵게 성사시킨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한 3국 협력에도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2015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및 시리아 분쟁 개입으로 인해 외교 역량을 유럽과 중동에 집중하면서 동북아에서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2016년에도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와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경제 둔화로 외교적 역량 발휘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그러나 러시아가 반미 연대를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지지(북핵은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동북아 역내 질서의 대립구도 강화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처럼 주변 4강의 역내 이익 구도는 2015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2016년 역시 미(일) 대 중(러)라는 동북아 역내 질서의 대립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 억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우려 및 의구심이 재작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립구도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위협에 대한 전 세계적 대처, 북한의 핵기술 증대로 인한 해결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주변 4강이 ‘협력’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북아의 일시적 갈등 관계 회복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IS, 중동 내분 문제 외에도 미국의 대선,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일종의 서진 정책), 일본의 역외 군사력 증강 기회 시도, 러시아의 서쪽에 대한 관심 등으로 한반도 문제가 주변 4강의 외교정책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종의 전략적 공간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2016년은 우리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일 수 있다.

- 이기현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나. 미국

(1) 2015년 정세

오바마 행정부는 실패국가와 테러리즘의 위협 그리고 패권의 경쟁자의 부상을 미국의 안보에 대한 주된 도전 혹은 위협으로 상정해왔다. 이러한 인식으로 2015년 미국의 대외전략은 중동에서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를 격퇴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동에서의 전쟁의 교훈, 군사적 과팽창, 그리고 재정문제의 지속은 최근 미국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 개입 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IS 격퇴를 위한 지상군 파견을 꺼리고 공습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재균형의 방편으로는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보다는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에 주력해왔다.

2015년 미국의 아·태지역 동맹 강화에서 일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2014년에 이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무력증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 있는 미국은 2015년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미일동맹의 연합작전 가능 범위를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 확장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안보와 대중국 견제 전략에 있어서 일본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미국의 재균형은 한·미·일 및 미·일·호 삼각안보협력의 강화로도 추진되었다. 한·미·일은 2014년 12월 군사정보공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명분으로 하지만, 중국 견제의 의도를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 호주는 남중

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중국 견제에 동참했다. 또한 미국과 필리핀은 동맹을 강화하면서 2014년에 필리핀 내 미군기지 사용에 합의한데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합동군사훈련 규모를 확대해왔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은 2015년 10월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의 체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주로 안보 측면에 치중되었던 재균형이 경제 측면으로 확대되었다. 이미 지난 봄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증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 의도가 확인되었으며, TPP 체결 직후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국가가 세계 경제의 규칙을 쓰도록 허용할 수 없다. 우리가(미국이) 그 규칙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 질서 측면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적극 추진되고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2015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고, 미중 간에는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는 양국 간 갈등의 정점에 놓이게 되었다. 항해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과 영토주권을 주창하는 중국 사이에 타협의 여지는 보이지 않았다. 물론 미중 간에 갈등만 노출된 것은 아니다. 2015년 12월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파리협정 체결은 미중 간 협력의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힘의 분포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역사적, 이념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정치적 불신은 양국관계를 협력보다는 갈등의 방향으로 이끌었고, 그에 따라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도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더 부각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재균형, 그리고 미중 간 경쟁의 심화는 2015년 한국 외교정책의 어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THAAD) 배치를 요구하였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한국은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이유는 사드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대중국 견제의 수단이 되면서 한중협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역사문제 해결의 어려움도 미중 간 경쟁구도를 배경으로 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무력증강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묵인하고 한일 관계의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요구하였고,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입지는 좁아지게 되었다. 또한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시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요구한 점도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2015년 한국 외교정책 딜레마의 주된 요인은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었다.

2015년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의 지속이었고, 북핵문제는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결의를 담고 있었지만, 그러한 결의는 실제적인 정책으로 발현되지 않았다. 북한 핵은 오히려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및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북중 간 갈등의 요인이 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을 돕고 있는 형국이다. 재균형이라는 상위 전략의 관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2016년 전망

동아시아에서 중국 그리고 중동에서 IS로 대표되는 미국에 대한 도전 그리고 군사적 과팽창에 대한 경계로 대표되는 미국 대외정책의 제약 요인은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한적 개입을 통한 IS 억제 그리고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가 미국의 주된 전략적 기조로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후보 선출과 선거의 과정은 대외정책에 대한 논쟁을 가열시키겠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며, 위험부담을 갖는 새로운 대외정책의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예, IS 격퇴를 위한 지상군 파병의 어려움).

2016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은 동맹 강화를 통해 지속 추진되고, 미중 간 갈등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및 테러리즘 등이 사안별 협력의 요인이 되겠지만,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과 정치적 불신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촉진될 것이며, 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또한 인도, 베트남을 비롯한 중국 주변 핵심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호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연합적 행동(예, 공동 순시 또는 훈련)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중협력의 근거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추동하면서, 미국의 재균형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은 경제 측면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TPP 추

진으로 아·태지역 경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2016년 미중관계는 냉전적인 전면적 대립으로 치달지는 않겠지만, 협력보다는 갈등의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자 하는 재균형 전략의 지속 추진으로 2016년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요구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관점에서 현재 한국은 아시아 재균형에 소극적인 동맹국이다. 따라서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은 가중될 것이다. 첫째, 아직 미결정 상태에 놓여있는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은 한일관계 악화가 재균형의 걸림돌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일관계 개선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미국의 사드 배치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요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셋째,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표명과 행동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중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한국 외교정책의 핵심적 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문제들은 2016년 한국 외교정책의 딜레마가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근본적 변화는 없는 가운데 제재 강화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는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IS와 전쟁을 수행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두는 동안 북핵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라서지는 못할 것 같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전향적 접근을 하기는 국내 정치적 위험성으로

인해 어려울 것이며, 제재의 실효성 부재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통한 다자적 제재 그리고 국내법에 의한 독자적 제재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전략을 고려할 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미국이 지역적 미사일방어체제 수립을 추진하고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대립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김상기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다. 일본

(1) 2015년 정세

2015년 일본은 중국의 계속된 국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안보, 경제면에서 미일 동맹의 지속적 강화 및 호주, 인도, 아세안 등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협력 관계 강화, 그리고 일본의 자체적 안보 강화를 추구하였다. 무엇보다 2015년은 일본 내에서 올해의 한자로 ‘평안할 안(安)이 선정될 정도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한 안보법제(安保法制) 제·개정,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은 국가의 평안(平安)을 둘러싼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2014년 7월 1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관한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 이후 일본 내에서는 안보 관련 법안(안보법제) 통과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었다. 집단적 자위권 논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아베 정권에 대한 야당 및 젊은 세대의 격렬한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5년 9월 19일에 안보법제가 참의원 본회의에

서 통과되었다. 안보법제 통과는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더욱 완성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아베 총리는 최종적 목표로 삼고 있는 ‘전후(戰後) 체제 탈피’를 위해 평화헌법 ‘개정’을 더욱 추진할 것이다.

9월 8일에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2018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었다. 현재 자민당 내에 포스트 아베가 부재하다는 점, 민주당 정권(2009-2012) 시절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함께 계속된 야당의 부진 속에 아베 총리의 집권은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진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핵심 정책으로 아베노믹스의 지속적 추진과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1억 총활약 사회’를 내세우고 있다.

2015년 미일 관계를 보면 미일은 4월 27일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10월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등 안보적,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은 미일 동맹을 글로벌 동맹 수준으로 확대했다. 즉, 미일 동맹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테러리즘 대처 등 전방위적, 포괄적 안보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일본은 TPP를 통해 수출 촉진과 함께 국제경제 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5년 중일 관계는 2014년 11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충돌 이후 계속되었던 극단적 대립 단계에서 갈등의 ‘관리’ 단계로 진입했고, 2015년에는 보다 안정화된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일 양국은 각종 정상회담 및 안보회의에서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연락 매

커니즘' 구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중일 양국 정상 역시 관계 개선을 천명하면서 교류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중일 관계는 '교류'와 '견제'가 병존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2015년 한일 관계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계속적으로 주장했음에도 아베 정권이 거부하였고, 한국 검찰의 산케이 신문(産經新聞) 지국장 기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과 '가치 공유' 문구 삭제, 일제 징용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 악화는 지속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일 외교에서 역사는 단호하게, 북핵·경제 협력은 강화하는 투 트랙 노선을 강조하면서 11월에 양국 정상이 취임 이후 최초로 만나는 한일 정상회담이 실현되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계기로 결국 12월 28일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 해결에 대해 한일 정부 간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다.

2015년 북일 관계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둘러싸고 명확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2014년 5월에 북일 양국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재조사하면 일본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스톡홀름 합의'). 그리고 2014년 7월에 북한이 납치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자 바로 일본 정부도 대북 송금 및 인적 왕래 등을 포함하는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했다. 하지만 2015년 7월로 예정되었던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2) 2016년 전망

2016년 일본의 국내 정세를 살펴보면, 먼저 아베 정권은 ‘전후 체제 탈피’를 더욱 본격화하면서 역사 수정주의 노선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2015년 11월 자민당 창당 60주년 행사에서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창당 이념인 평화헌법의 개헌을 표명했다. 곧 이어 자민당 내에 역사검증본부를 출범시키면서 2016년에도 역사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계속해서 역사 수정주의를 추구할 것이며, 이것은 전후 체제에 대한 부정과 함께 국내정치적으로는 아베 담화에 대해 미온적인 표현에 머물렀다는 우익 세력의 불만을 해소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6년 7월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아베노믹스 성과 및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 문제와 같은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거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안보법 제 통과 과정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반대 여론과 평화헌법 개정 이슈의 결부 여부, 공산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대 성사 여부, 2015년 법률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투표권 18세 이상’ 실시 등이 참의원 선거 결과에 주요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2015년 11월에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테러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외 관계가 예상된다. 특히 미일 간에는 미일 동맹의 글로벌화 가속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 및 미일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테러 및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한 2016년은 일본이 유엔에 가입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베 정권은 유엔 개혁에 대한 논의를 가속시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권의 유엔 외교 강화는 유엔을 통한 적극적 평화주

의 실현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의 완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의 강화는 ‘미일 동맹의 딜레마’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전후 체제에 대한 부정을 둘러싼 문제는 향후 아베 정권과 미국 간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안보적 측면에서 미일 동맹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후 체제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적 행보는 미일 관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일 관계는 양국 관계 개선 및 갈등 관리가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수년 간 계속된 센카쿠 열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연락 매커니즘’에 대한 합의에 진전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일 간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며, 중일 관계는 경제적 교류 증대와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이 미국의 요청에 따른 남중국해에 대한 개입 여부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중일 관계의 변화 가능성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한일 관계는 2015년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로 관계 회복 단계로 들어설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질서, 즉 한일 협력에 바탕을 둔 한·미·일 협력 구도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거사 및 영토 관련 현안이 산재하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불안 요소도

여전히 남아있다.

2016년 북일 관계는 여전히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 제재의 재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는 등 관계 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의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를 예상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보고서가 발표되더라도 납치자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 이기태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라. 중국

(1) 2015년 정세

2015년 중국은 경제성장률(GDP) 6~7%대의 중속(中速)성장에 따른 뉴노멀(New Normal; 新常态)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경제와 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나섰다. 이러한 경제 저성장 추세와 사회적 불안정은 대외전략에도 반영되었는데, 2015년 중국외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미국과는 갈등 속에서도 협력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비록 남중국해 문제와 해킹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했으나, 9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상호 충돌 가능성을 부인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환영하며, 패권국과 신흥대국 간 충돌은 피해야 한다”고 했고,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미중 간 신흥대국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중

국은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2015년은 중국지도부가 ‘육상·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해이다. 6월에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한 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회원국 서명을 완료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방문하여 일대일로 전략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 영국을 끌어들이었으며, 중국·러시아·몽골 간 3국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셋째, 중국지도부는 전방위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외교를 통해 한 해 동안 14개 국가를 방문했다. 러시아에서 개최된 전승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하여 중러 전략적 관계를 과시했고, 에너지와 항공 및 우주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협력을 추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도 계약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등과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00억위안(元) 상당의 기후변화 관련 기금 조성을 선포했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아프리카포럼’과 중국-아세안지역포럼 지도자회의’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 다자 대화체에도 참가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외교도 중시했다.

넷째, 한중관계는 정상회담을 통한 전략적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9월 2일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이루어진 한중정상회담과 11월 1일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 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가 강화되었다. 특히 9월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 간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한중관계의 핵심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다섯째, 북중관계는 지난 2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10월 9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서기 처 서기인 류윈산(劉雲山)이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북중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류윈산을 통해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희망하지만, 북한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곧 중국정부가 북핵문제와 북한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다만, 12월 북한 모란봉 악단의 북경 공연 취소 사태는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의 취약성 및 불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2) 2016년 전망

2016년 중국은 국내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에서, 뉴노멀 시대의 지속에 따른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전년도에 이룩한 반부패 정책의 성공을 이어받아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치엘리트에 대한 세대교체를 통해 2017년으로 다가온 19차 당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다.

다만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6%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대외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1월 16일 대만 총통 선거

에서 민진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향후 양안(兩岸)관계는 일정정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고, 중국의 대미정책에서 대만요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이전보다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중국의 대외전략의 핵심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사이버안보 등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할 것이고,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미국 내에서 대중국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최근 ISIS 테러집단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차원에서의 미중 협력이 지역차원에서의 분쟁이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반면, 지역차원에서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충돌은 피하고, ‘중국의 부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해군력 증강과 함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중시할 것이다.

2016년은 미중 간 규범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이 TPP 출범을 통해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하고 있고, 이에 중국은 RCEP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AIB 설립으로 대표되는 국제금융질서 구축 의도에 대해 미국은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안보분야에서는 이미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시작된 미중 간 안보질서 경쟁 역시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및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의 소지 역시 존재한다.

2016년 한중관계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한중 간 이견 차이는 있지만 양국관계를 훼손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해 중국이 자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할 경우 한중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일단락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측의 이해가 반영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 및 중국측이 필요로 하는 한중 간 대일 역사공조 문제 등이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경우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중관계는 1월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작년 10월 류윈산 중국 상무위원 방북 이후 재개되었던 북중 협력 분위기가 또다시 냉각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적극적으로 동참 하겠지만,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중국정부는 기존의 '특수관계'로 인식되어 오던 북중관계를 다시 한 번 '정상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우회적이고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 신중호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마. 러시아

(1) 2015년 정세

(가) 동북아에서 러시아 역할의 약화

2015년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는 2015년 상반기 우크라이나 사태, 하반기 시리아 분쟁 개입으로 인해 러시아의 외교 역량이 서방과 중동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러 관계는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전략적 공조를 유지했으나 협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가 부실했으며 이는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중국의 경기 침체에 기인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상호 교차 방문함으로써 양국 정상 간 친밀도를 과시했고, 5월과 8월에는 지중해 해역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서 중러 양국이 '해상 연합-2015' 제하의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군사안보 분야에서 협력의 굳건함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천연가스의 대 중국 수출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최근 2년 동안 양국이 체결한 350개가 넘는 투자 계약이 거의 시행되지 않는 등 경협에서의 한계를 노정하였다.

일러 관계는 아베 총리가 푸틴과의 개인 채널 강화를 통해 북방영토 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일본의 대러 경제 제재 동참으로 난항을 거듭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비판하고 쿠릴열도(북방영토)에 군사기지를 증편 및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

하는 등 일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2015년 하반기에 예측됐던 푸틴의 방일도 무산된 상태이다.

한러 관계는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지만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남·북·러 삼각 경험과 한러 무역액의 감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유명무실화 등으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타개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한국과 러시아 양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푸틴 정권이 야심차게 시작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도 대러 경제 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의 위기 상황과 주변국의 관심 부족 및 투자 미비, 남·북·러 삼각 경험의 부실 등으로 인해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돌과구 마련을 위해 푸틴 대통령은 9월 3~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1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선언과 9개의 선도개발구역 지정 등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새로운 지역 개발 전략의 효과는 미지수이며 아직 성과와 전망을 논하기는 시기상조일 것이다.

(나) 북러 관계의 모멘텀 상실

2015년은 ‘북러 친선,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15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북러 친선의 해로 선포되었으며 양측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2월 9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보낸 축전에서 “올해 러시아와 전면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표명했고 3월13일에는 북러 외무장관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주목받았던 북러 밀착 관계는 5월 김정은 제1위

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이 무산되면서 모멘텀을 상실한 듯 보인다. 러시아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남북한 정상을 초청했고 이로 인해 김정은의 방러와 남북한 정상 회담 가능성이 운위되었었다. 김정은의 방러가 무산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확인된 사실은 없으며 러시아 측은 북한의 내부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만 밝혔다.

2014년부터 강화된 북러 정치·군사 협력은 2015년에도 지속되어 11월 12일 양국 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에 관한 협정’ 체결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11월 17일 체결된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이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형사 사건의 수사과 기소, 재판 절차와 관련해 협조를 제공하는 조약이며, 범죄인 인도 조약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조약이다. 이들 두 개 조약은 앞서 2014년 11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불법 입국자 처리에 관한 협정과 더불어 탈북자 처리와 연계될 수 있는바, 우리 정부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사안이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 간 경제 협력에서도 몇 가지 성과가 눈에 띈다. 2월, 북러 합작 사업을 담당하는 북한의 특별 정부기관인 ‘북러 기업협의회’가 발족한 것을 필두로 하여 4월에는 제7차 북러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 정부 간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0월에는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대표단이 ‘북러 친선의 해’ 폐막식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회담록에 조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두 나라가 (중국의 개입 없이) 직접 교역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하는 한편, ‘조선무역회

관' 설립과 러시아 전력의 라선시시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러 경제 협력이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2014년 양국 교역액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2015년 1~3월 동안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모두 1천7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감소했고 수입 역시 44% 줄어든 57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연간 65억 달러에 달하는 북중 교역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며 경제협력을 확대해 왔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다소 의외의 결과로 평가된다. 확실한 시장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부 차원의 교역 활성화 조치만으로는 교역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러시아 측에서 가장 절실히 바라는 사업 분야는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들이지만, 그와 관련한 대북 투자 사업이 교역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현재로서는 북한이 러시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많지 않은 만큼, 러시아가 흑자를 이어가는 무역구조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며 2020년까지 무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양국의 목표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2016년 전망

2015년 시리아 분쟁 개입을 비롯하여 이란, 우크라이나/크림반도 문제 등으로 분주했던 러시아는 2016년에도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역할에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취약한 경제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남·북·러 삼각 경협과 반미 연대를 위한 대중 편승 전략 이외에 이렇다 할 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2016년에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대 관건은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의 종식인바, 최근 시리아 사태의 분쟁 개입 양상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이 2016년 러시아와 서방 간 일정한 화해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루블화 가치와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한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려우며 이는 러시아의 외교 역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서 여전히 한계를 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한 등거리 외교와 연중제미(連中制美)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그것이 평화적이고 러시아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지지할 것을 수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 같은 입장은 푸틴 대통령의 집권이 지속되는 한, 불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게는 적당히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태도가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유지시킨다는 차원에서 더 바람직할 수 있으며, 북한이 극단적으로 러시아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 한, 북한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려 할 것이다. 일례로 북핵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의도에는 이해를 표명하면서 반미 연대를 위해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북러 관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국 변수도 간과할 수 없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과 독자적으로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을 중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바, 2016년 북중 관계 개선에 따라 러시아의 존재감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

로 전망한다. 즉 “북한이 중국 대신 러시아를 선택했다”는 북러 밀착의 추동 명제는 2016년 상당 정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남·북·러를 잇는 메가 프로젝트 이외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전략적 지렛대는 전무한 상황이며,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개방 의지가 구체화되지 않는 한 러시아의 구상은 실현이 난망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통 큰 조치들을 추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남·북·러 협력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 발전 방향의 키를 동쪽으로 잡은 러시아는 앞으로도 극동 지역에서 산업과 인프라의 현대화, 외국 투자 유치, 아태 지역으로의 경제 통합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러 관계,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 움직임,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점진적 진전 등이 남·북·러 삼각 경협을 실현을 앞당겨 줄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북핵 실험 이후 전망은 오히려 불투명해졌다. 한국은 대북 제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러시아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인바,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양자 및 다자주의적 협력 구도 속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현승수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2. 북핵문제

가. 2015년 정세

2015년에도 북핵 문제는 진전되지 못했다.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며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진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5년 연 초부터 비핵화 논의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연합훈련의 즉각 중단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수용하기 힘든 요구들을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후 북한은 줄곧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논의를 차단하며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추진하였다.

먼저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실질적 준비에 노력하였다. 2013년 8월 이후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5MWe 원자로를 지속 가동함으로써 언제라도 핵 연료봉 인출 및 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및 남쪽 갱도를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핵실험을 위한 신규 갱도 굴착 작업 또한 지속하고 있다.

핵실험 준비 뿐 아니라 실제 핵능력 보유를 위한 노력도 배가하였다. 2014년 기존 ‘전략 로켓 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하여 핵탄두 상용화를 목표로 미사일부대를 재정비하였고, 현재 전략군을 중심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및 SLBM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미국 본토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우주 개발 명분으로 지속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용 신형 엔진실험을 2015년 7월에 실시하였고, 9월에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신설을 언론에 발

표한 바 있다. 아울러 5월에는 신형 잠수함 ‘고래’ 탑재용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시험에 성공함으로써, 핵 투발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에서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KN-08 미사일을 공개하며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 로켓’으로 소개하는 등 핵 보유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고양하려 노력하였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5년 9월에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같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요구하고 내심 기대했던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한미중 차원의 3국 협의 강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대신 대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일 3주기 전날인 2014년 12월에 중국은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거론하였고, 2015년 1월에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 16자 원칙 복원’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9월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정책과 관련 비핵화보다 평화와 안정을 더욱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 발표문에 시진핑 주석의 북핵 발언 부분을 누락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은 2015년 한 해 동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전략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중관계 복원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계속 유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강화와 핵 힘 위협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은 주로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에 주력하였다. 우선 한국은 북핵·

북한문제와 관련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저지하는 가운데 중층적인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설득의 방안과 기본 원칙으로 6자회담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코리안 포물러(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천명하면 대화 재개와 함께 경제 지원에 나선다는 원칙)를 토대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을 가지고 다룰 것이라 천명하는 등 강압외교 공조를 통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대화재개 조건으로 고수하고 북한이 이를 줄곧 거부함에 따라 실질적 성과는 도출되지 못하였다.

나. 2016년 전망

2016년 북핵 문제는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분석 가능하다. 우선,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축적해온 핵 능력을 기술적 차원에서 확인하고자, 이미 사전에 계획했던 실험을 예정대로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2016년 5월 개최 예정인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결속을 다지고 정권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최근 북한 경제가 다시 정체 국면에 접어들자, 기존 경제-핵 병진노선의 성과에서 핵 부문 업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은 진전된 핵실험의 형태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을 전환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시험용)수소폭탄

실험이었으며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2016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폭탄의 제조 기술력을 일부라도 적용한 소위 ‘증폭핵분열탄’ 실험으로 입증된다면, 이는 북한의 핵능력이 소형화·경량화·다중화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위협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국제적 강압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 강화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김정은 정권이 제재를 감내하겠다는 결기로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북한이 제재에 대한 오랜 내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북한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 압박 수단이 여의치 않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독자적 제재를 강행 및 지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셋째, 북한의 핵동결 및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상당기간 난망할 것이다. 이번 핵 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강경하며,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해 협상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울러 핵동결 및 비핵화 과정에 드는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비핵화 기대가 난망한 또 다른 이유이다. 만약 북한이 수소폭탄 기술 능력을 일부 보유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북한이 핵 동결 및 비핵화에 대한 대가를 예전에 비해 훨씬 높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상당기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2016년 5월 이후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간 접촉이 재개되더라도 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핵 대립 정국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금강산 관광재개 및

5.24대북제재 조치와 같은 북한의 핵심 요구 사항을 북한과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 실험 의제가 포함된 남북 간 대화를 일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다섯째, 이번 핵실험으로 김정은 정권이 향후 핵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 과시하는 공세적 핵 강압전략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강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결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가도발을 적극 고려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추가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 그리고 SLBM 추가 실험을 연이어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을 겨냥한 도발 가능성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국지적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또한 높다. 당분간 북한은 8·25합의 직전과 같이 군사적 강경대응 조치로 한반도의 위기 국면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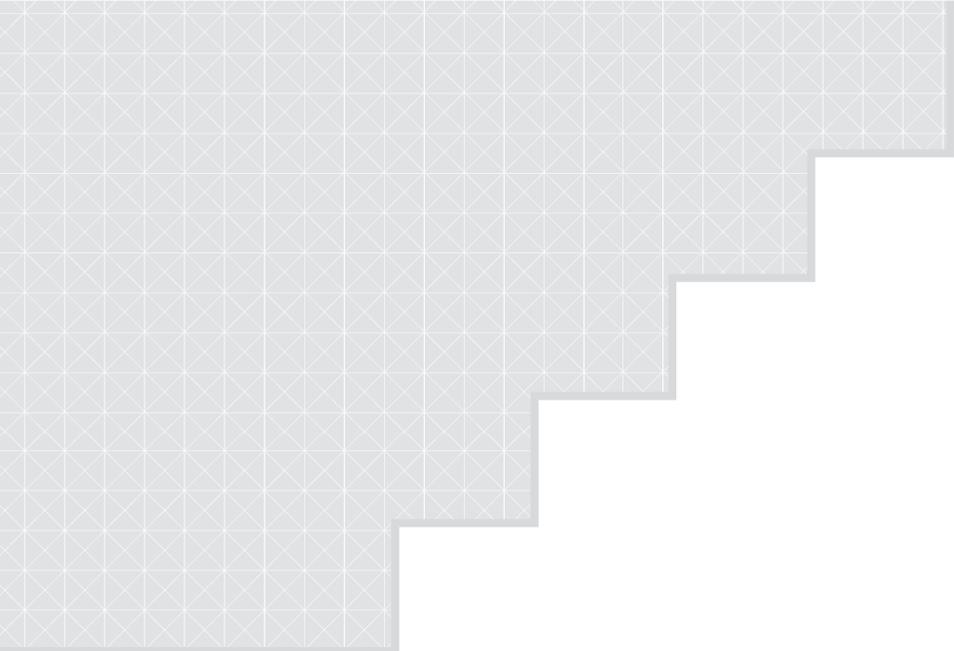
여섯째,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 강화 요구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 소위 미국의 전략자산을 조기에 그리고 대규모 동원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도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을 설득할 명분이 강화되었고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서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그 논쟁이 가열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능력 및 전략적 효용성에 대한 기대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미국 일각으로부터 중국 경사론이라는 오해를 사면서까지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힘썼던 주요 이유는, 바로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제 역할을 해달라는 혹은 할 수 있다는 전략적 요구와 계산 때문이었다. 북한이 중

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핵 실험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적 위신 수호와 한반도 안정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위해 유례없는 대북 강경정책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2016년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핵 위협의 증가로 인해 한국 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대응할 것이다. 이에 북한은 추가 도발 등을 포함해 격렬히 저항할 것이다. 즉 당분간 북한에 대한 강압과 북한의 역(逆)강압이 반복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이다.

- 정성윤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II

북한정세



1. 정치동향

가. 2015년 정세

북한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조국해방과 당창건 70돌을 맞아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을 향한 사상, 총대, 과학기술이란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내 정치 측면에서 세 가지 과제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당의 영도체계 심화 및 사상교양 강화를 통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통치기반 구축이다. 둘째, 국방공업에서의 병진노선 관철 및 국방력 강화이다. 셋째,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이다. 이 기조에 따라 2015년 북한정치는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기층조직을 정비하며 김정은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 상반기 주요 정치일정을 보면, 1월 28일 제4차 당세포비서대회 개최, 2월 10일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 2월 18일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김정일 유훈을 지침으로 하여 당의 유일적 영도에 도전하는 현대판 종파분자 분쇄 및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강도 높은 투쟁에 대한 결정서 채택), 2월 23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국가방위 산업 전반 및 조직문제 취급), 3월 14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당 중앙위 과업관철 토의),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13기 3차 회의(내각 경제사업 자기비판 및 경제건설을 당의 의도에 따라 수행할 것 토의, 박도춘을 국방위 위원에서 소환하고 김춘섭을 국방위 위원으로 보선), 4월 11일 김정은 당 제1비서·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3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김정은이 수령영생 위업을 실현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는 등 정치적 기적을 이루었다고 평가), 4월 24~25일 인민군 5차

훈련일꾼대회(훈련혁명을 일으켜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투준비 완성할 것 결의), 4월 25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신년사 관철 1/4분기 평가와 2/4분기 대책 토의, 최고인민회의 법령 ‘201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와 ‘2015년 현금 유통계획을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를 채택), 5월 13~14일 제2차 전국청년미풍 선구자대회(청년들이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강성국가 건설의 돌격대로서 사명과 임무 다하도록 추동)를 진행하였다. 이 정치과정 중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러시아 방문 열흘 만인 4월 30일 처형되었다.

하반기에는 7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대사(大赦)실시(해방과 당창건 70돌 기념 8월 1일자 대사면), 도·시·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7월 19일 선거 실시, 99.97% 투표 및 후보자에게 100% 찬성투표 결과 발표), 7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사회주의 노동법>과 <여성권리보장법> 개정(여성 근로자들의 산후 휴가 90일을 180일까지로 수정), 7월 25일 소위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62돌 기념 4차 전국노병대회(당의 선군혁명 영도 따라 1950년대 시대정신 후대들이 계승할 것 강조) 및 정전협정체결(7.27) 각 기관 경축행사 통해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에 따른 충성 및 반제계급투쟁 강조, 8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조국해방 70돌을 맞으며 현재의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을 공화국 표준 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평양시간으로 명명(2015.8.15부터 적용 공포) 결정, 8월 14일 국방위 정책국 담화 통해 지뢰도발사건 무관 주장, 8월 20일 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 긴급소집(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 선포 명령), 황병서·김양건 중심 8·25합의 정당화, 8월 28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8·25합의 이전 전시상황시 조치 평가 및 군사력 강화 위한 전략적 과업 토의, 김정은이 라선시 큰물피

해복구사업 군이 나서 당창건 기념일 전 끝낼 것 지시), 8월 28일 청년절 기념 각종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9월 8~9일 정권수립일 67주년 경축 대회 및 각종 행사, 9~10월 당창건(10.10) 70주년 기념 각 기관의 각종 행사, 10월 9일 당창건 7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변혁의 시대, 주체혁명의 새 시대 요구에 맞게 당의 전투력 강화 과업제시, 당을 김일성-김정일의 당으로 강화 발전, 김정은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위업, 강성국가 건설위업의 최후 승리를 위해 역세계 싸워나가는 함 제시), 10월 10일 당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에서 김정은 육성연설(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당 3대 전략 제시), 10월 20~22일, 24~26일 20차 남북 이상가족 상봉행사 후 10월 30일 당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2016년 5월 초에 제7차 당대회 개최' 발표(강성국가 건설 및 '김일성·김정일의 당' 강화 향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혁명임무, 당과 혁명발전 요구를 반영하여 당대회 소집 결정)하였다. 이 시기 최룡해의 혁명화가 진행되었다.

이어 11월 11일 제2차 전국 여맹 초급일꾼 열성자대회, 전국보건일꾼 정성경험토론회, 11월 16일 어머니날 행사 및 17일 여맹 창립(45.11.18) 70주년 중앙보고회 등을 진행하며 강성국가건설 및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11월 19일 사법검찰기관 창립(45.11.19) 70주년 중앙보고회(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 도수를 높여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제기), 11월 20일 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모든 단위에서 '김일성·김정일 유훈 및 김정은 서한' 관철 결의), 11월 29일 직맹 중앙위 8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당 제7차 대회 노력적 성과로 준비위한 토의), 12월 13일 3차 전국

재정은행일꾼대회(김정은 서한, ‘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수행 결의), 12월 28~29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30) 4돌 기념한 각종 경축 공연과 모임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인 12월 29일 새벽 김양건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31일까지 장례가 진행되었다. 주목할 점으로 30일 발표된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에 항일빨치산 거두인 김기남과 최태복 사이 서열 5번째로 최룡해가 명단에 오르며 정치무대에 복귀한 것이다.

이와 같은 2015년 북한의 정치과정을 총평할 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당을 통한 정치적 정당화이다. 당정치국 회의의 권위를 복원하려 하며 경제 및 대중 사업에서도 당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당=3대 수령 김정은’이라는 인식을 안착시키려 했다. 둘째, 장성택의 당 행정부를 폐지한 이후 조직지도부와 비서국 및 각 부문별 당비서 간 역할을 조정하는 모습이었다. 셋째,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로 비대해진 군부를 김정은의 당으로 집결시키는 정치 양상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에 비해 당기구인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또한 군기구인 인민무력부와 총참모부에 비해 당기구인 총정치국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더불어 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엘리트 감시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정보력을 확장하였다.

‘폐쇄적 통치술’이 두드러졌던 김정일은 정책결정시 자신의 오랜 경험에 기초하여, 관련분야 측근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결정사항을 국방위원회와 조직지도부를 통해 수행하도록 관리하였다. 반면 김정은은 개인독재 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령이 주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정책결정 기능을 복구하며 전문성을 보완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운영의 제도화를 추구한다고 하여도 수령독재 특성상 김정은 개인의 욕구와 판단이 정책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책의 불안정성과 정책결정체계의 혼선이 표출되는 모양새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 내부의 권력과 이권 구조 변동과 연계된 정책의 돌출성 및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시기와 국면에 따라 다양한 요소 및 집단들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정책결정 주체들 간의 세력관계도 변화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므로 김정은 시대 정책결정구조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 행위자들이 갈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신과 자기 가계의 보신(保身) 및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노리는 권력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눈에 들기 위해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모습이다. 2015년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하며 김정은의 현지 지도 수행빈도가 높았던 대남비서 김양건의 12월 29일 새벽 의문의 교통사고가 이러한 정치 상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엘리트들의 이전투구 상황을 정권 공고화에 활용하려는 김정은이, 핵심 간부들에 대한 첩보력 강화 뿐 아니라 충성경쟁을 유도함에 따라 엘리트 간 상호 견제를 위한 고발(辛告)도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첩보, 충성경쟁 양상, 고발 등을 활용하여 김정은이 핵심 권력엘리트를 구조조정하는 모양새이다. 2015년 상반기 현영철 숙청 및 하반기 최룡해 혁명화는 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2016년 전망

2016년 북한 정치 전망과 관련한 핵심 일정은 제7차 당대회이다. 북한은 지난 10월 3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통해,

2016년 5월 초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정치일정에 맞추어 상반기 북한은 대내 정책 차원에서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각 단위의 속도전, 충성맹세, 결의대회를 전 사회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각 도 단위 당위원회회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대중 활동력 및 충성심 고양작업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함께 권력정치 차원에서 당대회 준비를 계기로, 김정은의 측근 세력 정비와 함께 ‘김정은 체제의 핵심 기관과 인적 진용 다지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현지도 및 정치행보를 볼 때 두 가지 특징이 전망된다. 먼저 제도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를 보위할 핵심 기관이다. 다음으로 인물 차원에서 김정은의 최측근 인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제도차원에서 김정은 체제의 정치를 주도하는 3대 권력기관은 조직지도부, 총정치국, 국가안전보위부이다. 이 3대 기관은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당원, 군대, 감시 분야를 대표한다. 또한 독립적인 이권과 함께 북한 전역에 조직체계를 갖춘 대표 조직이다. 김정은 시대 이 기관들의 권력과 이권이 확장되었으며 김정은 정권 공고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400~500만 명까지로 증언되는 당원 및 간부들을 장악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관리 감독하는 당 조직지도부이다. 대표 인물은 조연준과 조용원이다. 둘째, 군대를 관리감독하며 당의 군사전략을 지휘하는 총정치국이다. 대표 인물은 황병서이다. 셋째,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고위직 엘리트 숙청을 주도하며 김정은 독재권력 공고화를 실행하는 국가안전보위부이다. 대표 인물은 김원홍이다. 이들 기관과 인물들이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

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또한 당대회 이전까지 북한정치를 전망할 때 주목할 점은, 북한체제를 구축했고 3대에 걸쳐 유지했던 80대 중후반 파워엘리트들인, 김기남(사상-선전선동), 최태복(교육), 오극렬(군사), 태종수(총무), 강석주(국제), 김영남(국가행정) 등을 대체할 세력이 누구인가? 이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엘리트들의 이전투구 및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활용하는 김정은의 통치술이 주목된다.

더불어 김일성 가계에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그를 보좌하고 있는 김여정과 앞선 3대 권력기관의 핵심 엘리트, 그리고 혁명화 이후 복권한 최룡해를 제외하고, 2016년 북한정치에서 주목되는 인물들이 있다. 지난 12월 사망한 김양건을 제외하고 2015년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경제·기술·행정 전문가 2인이다.

먼저, 2015년 4월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한 곽범기이다. 1939년생으로 현재 77세인 곽범기는 내각 부총리 출신인 경제행정 분야 전문가이다. 다음으로, 2015년 8월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한 오수용이다. 1944년생으로 현재 72세인 오수용 역시 내각 부총리 출신이며 전자공업 분야 전문가이다. 이들은 자기 분야에서 특히 내각 활동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말단으로부터 성장한 고위층 테크노크라트들이다.

이들의 승진은 전문성을 갖춘 테크노크라트들에게, 2016년 새로운 정치적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관료들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관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2016년 당 대회를 기점으로 열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잡기 위해, 소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충성의 업적 쌓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북한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계산해 볼 때, 2012년 김정은 집권 초기에 비해 현재 김정은의 대내 정치 환경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중단기적 개인독재 환경은 김정은 주도 정치에 이로운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체제 구조적 시각에서 볼 때, 세습독재의 문제, 외화벌이와 외자유치 등 안정적 통치자금 마련의 난항, 핵 및 인권 문제 등을 이슈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과 대외관계 난관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 목표인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위한 핵기술 발전과 더불어, 김정은의 통치술 과시 및 권력공고화 측면에선 초기에 비해 성과적인 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대북지원 환경, 대미·대중 협상력 강화 측면에서는 별 성과가 없는 편이다.

북한은 기간 대내 통치 성과에 힘입어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30년 이상의 집권을 고려한 김정은의 통치전략을 드러낼 수 있다. 북한 변화와 연계된 중요 아젠다는 2가지이다.

하나는 부분개혁과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진 시장경제 수용 가능성이다. 만약 북한 정권이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나선다면, ‘제한적 개혁과 국가주도 개방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평화협정 체결과 핵동결 연계 전략이다. 최근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및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도발적·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4차 핵실험 전후 북한의 정치행보로 볼 때, 5차 당대회 시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나선다면 더 이상 핵기술 발전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핵동결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 박영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2. 경제동향

북한경제는 1990년대 말 이후 대체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더욱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에는 제로 성장 또는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2016년에도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단,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현상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실적이 나빠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의 근거는 외화벌이 여건 악화이다. 외화벌이는 그 동안의 경제회복을 이끈 주요 요인 중 하나였는데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광산물(주로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은 중국의 성장 둔화와 석탄 사용 억제 정책 및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정체 내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벌이 사업인 노동자 해외 송출 여건도 나빠졌다. 해외 북한 노동자의 대다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나가 있다. 그런데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2014년 중반 이후 1년 사이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외화벌이에 큰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다.

외화벌이가 감소함에 따라 북한의 상품수입도 위축되고 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2015년 1~11월의 대중국 상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나 줄어들었다. 특히 전기전자, 기계류, 플라스틱, 섬유 등 주요 상품의 수입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들 상품은 대부분 북한에서 생산하지 못하지만 경제 운영에 꼭 필요한 것들로, 수입 감소는 북한 내부경제로의 중요 물자 공급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는 흔히 농사 작황이 거론되고 있다. 2015년 봄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북한의 식량생산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농업생산이 줄었다 해도 감소폭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 식량사정도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봄 가뭄은 극심했지만 여름 이후 기상여건은 괜찮은 편이었으며, 협동/국영농장의 집단농업 외에 소토지 농사, 개인축산 등 개인농업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어 식량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과거보다 향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과 식품가공업이 발전해 농산물 및 각종 식품의 유통·분배 효율성이 향상된 점,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 식량수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국영경제 부문의 최근 실적도 다소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고난의 행군'이 끝난 후인 2000년대 초부터 기존 국영기업의 설비를 재건·현대화하거나 신규 국영기업을 설립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2015년에는 이런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북한당국의 산업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자립경제 노선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산원료와 연료를 이용하는 구시대적 중화학공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영기업들의 생산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원료와 연료 낭비 문제도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영산업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전력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2015년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등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불리한 입지, 낙후한 발전설비, 무리한 일정에 따른 부실공사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전력공급의 대폭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인민생활 향상’ 목표를 내세우며 경공업 부문 생산과 투자 성과를 자주 선전하고 있으며 국산품 소비와 원료·연료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다. 경공업 중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가장 쉬운 업종은 식품가공업이며, 실제로 이 부문 국영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은 어느 정도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의 최근 경제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 소비성 건설 사업은 2015년에도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대표적 성과가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이런 사업은 간부층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생산적 투자에 써야 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는 국영경제 개혁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협동농장 관리제도 개혁인 ‘포전담당책임제’에 대해서는 노동신문 등 공식 매체에서 종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선전하기도 하지만, 국영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 국영산업 부문은 전력난과 낙후한 설비 등 기술적 제약의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리방법을 개혁해도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중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2013년 초 이래의 물가안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당국이 과거의 통화남발 정책을 버리고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2009년 연말 화폐개혁 이후 외화통용 현상이 크게 진전되었으므로 북한 원화 기준 물가가 갖는 의미는 과거보다 크게 퇴색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시장의 일상적 거래 중 많은 부분이 북한 원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물가안정은 일반주민들이 시장 및 사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과 사경제의 발전은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경제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과 사경제는 더욱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추세는 2015년에도 큰 변화 없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북에서 나온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시장화/사유화로 지칭할 수 있는 현상들, 즉 시장거래 증가, 개인사업 확대, 사유재산 형성, 사적인 노동자 고용, 국영기업 상업화 등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이 시장과 사경제의 발전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시장과 사경제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상의 재정수입을 획득할 수 있으며, 여기서 얻은 수입이 국영부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국영경제와 사경제 간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섬 게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시장과 사경제의 발전 속도는 과거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개방 시기에 비해 훨씬 느릴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경제가 최근의 부진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회복하려면 새로운 돌파구를 열 필요가 있다. 외화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외화벌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가지 가능한 방향은 노동자 해외 송출을 늘리는 것이며, 이미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방법은 외자기업을 유치해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북한당국은 이를 위해 2013년부터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계획과 구상에 머물러 있을 뿐, 본격적인 개발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구·개발구 개발이 본격 추진되려면, 북한의 대외 및 대남관계가 개선되어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 또한 기반시설 개발자금의 현실적 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유망한 방법은 중국 및 한국 정부의 지원인데, 이것 역시 대외·대남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있어야 실현 가능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더 과감한 개혁정책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방향은 개인사업과 사기업의 완전 합법화, 가족농 제도로의 전환, 사유재산권의 공식 인정 등인데, 북한당국이 이 정도로 적극적인 시장경제 개혁을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당국은 시장과 사경제를 용인하면서도 사회주의적 국영경제를 지키고 싶어 하며, 지나치게 적극적인 개혁이 기존 통치체제를 침식할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경제는 당분간 정체 상태를 보일 것이며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구성된 이중구조적 특징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장과 사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화벌이 여건도 개선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플러스 성장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단, 북한당국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건설정책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대외 강경노선을 고집한다면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석진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3. 사회동향

가. 2015년 정세

2015년 북한 사회분야에서 특징적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론에 입각한 체육·건설·관광 등에서의 각종 성과와 치적을 과시하는 행보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 전반에 시장화가 확산·심화되면서 주민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 점이다. 셋째, 이런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의 사상적·물리적 통제가 강화·지속된 점이다. 마지막으로, 시장화의 진전과 자본주의 문화 및 정보 유입에 따른 ‘시장세대’의 부상과 이에 대응한 당국의 ‘청년중시’ 정책과 담론이 강조된 한 해였다.

체육을 활용한 체제결속과 김정은 리더십을 강조하는 ‘체육정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체육강국’ 담론과 각종 경기 성과에 대한 선전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주력했다. 연초부터 ‘체육강국’ 건설하기 위한 당의 ‘체육중시풍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3월에는 전국체육인대회를 개최하여 체육선수들을 고무시키는 한편 장성택이 주도했던 체육계에 대한 인적 교체 역시 전격적으로 진행돼 주요 간부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동아시아컵에서 우승한 북한 여자 축구선수들에게 김정은의 축하전문이 전달되고 평양에서 선수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를 개최하여 체제결속에 활용하였다. 북한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 한 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90여 개를 획득하였고 이런 체육열풍의 여세를 몰라 전국 6개 도(청진,

혜산, 강계, 평성, 해주, 원산)에 체육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8월 15일부터 체육 전문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건설부문 활성화를 통해 김정은의 치적과 이상화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회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한 점이다. 2015년 북한은 각종 건설사업을 김정은의 ‘인민중시’ 사상을 구현하는 것으로 선전하며 10월 당창건 70주년에 맞춰 마무리할 것을 재촉하며 사회적 동원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되고 있는 도시미화와 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해 건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2015년 대표적인 건설로는 평양의 대규모 주택단지인 ‘미래과학자거리’ 조성사업, 10월 10일 창 당건일 완공을 목표로 이루어진 평양 대동강 축섬의 ‘과학기술전당’ 건설, 대동강 호안사업 등이 있다. 특히 미래과학자거리에 건설된 53층 초고층 아파트는 김정은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이자 ‘과학중시’ 사상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이밖에도 함흥시 과학자 살림집 건설, 개성시 백화점 개진, 원산시 상수도망 공사, 순천시 살림집 건설 등 전국 각지에서 건설 사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전국적으로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15년 강계, 평성, 사리원, 혜산, 남포, 평양 등에서 동상 제막식이 진행되었으며, 김정일 사망 이후 4년 동안 전국에 250개의 김일성·김정일 기념탑, 35개의 동상이 건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광부문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가장 활발한 움직임과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관광을 외화벌이 수단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개방적인 리더십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화벌이를 위해 다양해지고 유연해진 관광사업이 일정 부분 사회적 개방효과를 가져오는

부분도 있다. 북한은 중국 동북 3성을 겨냥한 ‘접경지역 관광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북·중 접경 도시에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2015년 역시 골프관광, 마라톤관광, 등산관광, 비행기관광, 자전거관광, 체육관광, 노동생활 체험관광, 생태관광, 캠핑관광 등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제도 유연해져 북한 내부의 모습을 전하는 관광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둘째, 사회 전반에 시장화가 확산·심화되면서 주민 일상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당국은 주민 시장활동과 소비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을 통제하는 데 주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휴대전화의 보급이 확대된 부분이다. 현재 북한 주민 약 10%에 해당하는 약 250만대 이상의 휴대폰이 주민들에게 보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장 유통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시장만 406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밖에 다양한 형태의 시장 유통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의 형태로 빠르게 확대·발전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제1비서가 ‘수입병’을 지적한 이후 당국 차원에서 “수입품에 대한 환상은 병”이라고 지적하며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고 나선 부분이다. 주민들의 수입의존 경향을 경계하는 당국의 태도에는 시장화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고심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2015년에도 빈부격차가 가속화되면서 계층 갈등의 소지가 짙어지고 있으며, 시장 종사 양태도 다양화되어 숙박업, 노래방업, 비디오촬영업자, 매대분양업, 부동산 거간(브로커), 개인버스업자, 사금융업 등이 일반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세대를 겨냥한 김정은의 ‘청년중시’ 행보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시장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전후로 태어나 시장 중심적 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대로 이들은 국가보다는 개인, 조직보다는 시장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2015년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개최하는 한편 7월에는 제4차 전국노병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세대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8월 청년절에는 ‘청년들의 변질’을 우려하였고 10월 당 창건 기념일에는 연설을 통해 ‘청년중시’ 정책을 선언하였다.

나. 2016년 전망

2016년에는 정책방향 및 구호 측면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인민중시’, ‘청년중시’ 등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 2016년 5월에 예정된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속도전식 군중동원 및 당적 체제 정비를 통해 이완된 사회질서를 규율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에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는 상위 목표 속에 건설·체육·관광의 3대 부문을 각별히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2016년에도 이들 부문이 계속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7차 당대회 전후로 ‘인민’, ‘경제’, ‘청년’ 등을 주제로 한 구호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구학적 으로 중요한 연령층이 된 시장세대를 체제 보위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관련 담론과 정책이 당대회를 통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신규 당원을 대거 충원하면서 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작업을 전 사회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당원의 대거 충원 과정에서 당규율과 기층조직인 당세포의 역할과 체계를 세우면서 이완된 사회기강을 바로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세대의 충성심을 다잡고 고취하기 위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상교양 및 조직생활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5대 교양'(위대성, 김정일애국주의, 신념, 계급, 도덕)을 '청년' 담론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청년 관련 사상을 제창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정세의 흐름상 당대회를 통한 체제 내적 결속, 사회기강 확립에 무엇보다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각 단위와 단체별로 제7차 당대회에 맞춰 군중대회의 열기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김정은의 '애민' 또는 '위민'의 행보가 '인민제일주의' 담론을 통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아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흥 민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4. 군사동향

가. 2015년 정세

2015년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강화를 위해 군사적 행보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였다. 2013년 장성택 처형 이후 지속적으로 상층부 권력층을 숙청함으로써 김정은 자신의 견제함과 권위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상시켰다. 특히 군부엘리트들의 잦은 교체는 김정은이 군부를 길들이기 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 군의 충성심을 유도를 통해 자신의 군사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례로 김정은 정권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직은 김영춘 → 김정각 → 김격식 → 장정남 → 현영철 → 박영식 등으로 잦은 교체를 실시하였고, 총정치국장 역시 군부 출신이 아닌 최룡해, 황병서 등의 당 출신 파워엘리트들이다. 이러한 군부의 친정체제 구축과 함께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과 정찰총국장 김영철을 유임시키면서 강력한 통제기제를 북한사회의 유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강조하였는데, 올해 김정은 정권은 인민군대가 당의 홍위군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조하였고 대대적 군사훈련과 국지적 도발, 그리고 장단거리 미사일 실험 등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2015년 공군과 해군을 중심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켰으며 군사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하여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는데, 이에 대응한 북한의 대남 특수전 군

사후련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북한의 핵심 3대 침투전략인 잠수함-특수전 요원-공기부양정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 준 실례이다.

또한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70년 행사를 중심으로 김정은 본인의 군지휘능력 과시하였다. 지난 12월 10일 김정은은 평양 평천혁명 사적지를 시찰한 자리에서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라는 언급을 통해, 지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다중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들을 탑재한 전략 로켓을 공개했다” 수소폭탄 개발 사실을 시사한 사실과 연계되어 이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김정일 유일체제에 대한 정통성 제고를 위해 군부 장악, 군 리더십, 핵개발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은 육해공군 2만여 명이 참가한 열병식과 10만명이 동원된 군중시위 등을 선보이며, 소형화 핵탄두를 탑재했다는 신형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과 300mm 신형 방사포도 처음 공개했다. 그러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고, 당 창건 7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로 핵실험 감행시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변국 외교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또는 주변국 동향을 주시할 목적으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의 여지를 남기며 지속적으로 핵개발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10월 30일 정부의 한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장소에서 굴착 공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는데, 현재 북한이 굴착 공사를

하는 곳은 과거 2006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핵실험을 했던 곳과 다른 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갱도 건설 목적이 당장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향후 핵실험 의지를 나타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이고 있다(연합뉴스, 2015/ 10/30). 지난 11월 15일 정부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1월부터 12월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했다”고 밝혔다(국민일보, 2015/11/16). 이러한 정황을 보면 북한은 대남·대외정책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언제든지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2015년 북한군의 주요 도발 일지

일자	내용
2015.2.21	단거리 전술발사체 5발 발사
2015.3.2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2015.5.9	동해 원산 지역 KN-01 미사일 3발 발사
2015.6.14	동해상 KN-01 미사일 발사
2015.8.4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2015.8.20	경기도 연천 서부전선 고사포와 직화기 발사

2015년 북한의 군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의 정통성 제고를 위해 군사적 리더십을 과감하게 활용하였다. 김정은은 당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의 핵심 권력기관을 통해 당·정·군에 대한 인적 교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동시에 ‘전략군’의 신설과 다종화된 미사일 능력 과
시, 훈련 강화, 빈번한 계급강등 및 인사교체 등을 통한 군부 장악 등
군사부문에서의 과감한 행보 역시 권력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핵무장 국가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전략무기개발과 재래
식 무기의 재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2014국방백서에서 북한은 공군을
중심으로 전체병력 1만여명으로 늘렸으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
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¹ 또한 신형 비대칭 무기개
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2015년 5월 함경남도 신
포 인근 동해상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KN-11
(북한명, 북극성)을 신포급(2000t급) 잠수함에서 쏘아 올렸다고 노동
신문이 보도 했으며, 11월 28일에도 원산 근처에서 KN-11 탄도 미사
일 발사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고도화와 함께 북한
은 특정 분야에 효과적 재래식 전략증강과 군사력 증대를 시도 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남북대화와 미북간 대화를 열기 위해 도발 강도를 조
절하면서 외부의 대북정책을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군사적 기제를 활용하고 있다. 남북대화를 위해 재래식 화기를 통한
군사적 도발을 통해 남한정부와의 대화재개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였
으며,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즈음해서도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
험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동향을 살피는 모

1 북한은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40여kg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HEU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5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
토를 위협가능한 능력을 보유(1만km의 대포동2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습을 보이고 있다.

나. 2016년 전망

2016년 북한의 군사동향은 2015년과 연계하여 2016년은 제4차 핵 실험(북한, 수소탄 실험주장)을 필두로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면서 대미·대남 정책을 대담한 군사적 공세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1월 6일 기습적 제4차 핵실험을 수소폭탄이라 주장한 것은 진일보한 핵기술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정권 공고화 기제로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입장을 핵무기 고도화, 장거리 미사일 등의 외교적 협상 도구로 이용할 것임을 드러냈다. 이번 핵실험은 이후 더욱 고립될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당분간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게 유화적 외교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만, 전반기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북한의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와 함께 김정은의 군사지도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강화와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대남도발도 전개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미 2013년 ‘전쟁준비의 해’, 2014년 ‘싸움준비 완료의 해’, 2015년 ‘통일대전 완성의 해’ 구호를 공언해 왔다. 이는 국지도발부터 전면전까지 아우르는 대남군사 정책 시나리오를 치밀하고 준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핵실험을 필두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등의 이동타격능력 향상과 장거리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대미 평화협정 요구와 함께 보다 공세적 외교전을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군사적 대남 긴장상황 연출을 통해 제7차 당 대회를 준비하면서 군부장악과 김정은 정권 공고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지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후 극적인 남북 8·25합의를 통해서 북한은 대남 온건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12월 남북당국회담 결렬과 북한 대남비서 김양건 사망, 그리고 기습적 제4차 핵실험 등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강경화를 예고하고 있다. 2016년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반 기 정례적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하여 북한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대남정책으로 '통일대전' 구호를 생각해 본다면, 최근 8·25합의와 상관없이 강경한 대남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수단으로서 제4차 핵실험 감행과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그리고 황폭한 대외적 발언에 있다. 이는 선대 김정일이 구사했던 '선군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핵개발을 통한 강경한 대남정책은 체제경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과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을 통하여 북한내부 정치를 지배하고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경제봉쇄 정책에 맞서 반제국주의 논리를 전개시켜 체제정통성 확립에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에도 김정은은 당을 중심으로 북한 군부 장악, 군사령관으로써의 위상강화, 그리고 한국·미국·일본의 3각 동맹을 빌미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여 국내정치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은 핵의 소형화 경량화 등 최첨단 무장장비 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공세적 군사력 확대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북한은 병진노선을 추구하기 위해선 기술적으로 PU탄을 완성해야 하고, HEU탄을 개발했을 경우 무기화에 성공했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해 보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남북관계 담보시에는 재래식 화기를 활용한 각종의 대남 군사강경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립된 대외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 가능성이 크며 지속적인 이동 타격수단의 첨단화 실험 등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대화 시도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한정권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대외 전략카드’로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홍석훈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5. 대외동향

가. 2015년 정세

2015년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는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핵보유와 인권 탄압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외교는 수세적 대응외교에 머물렀다. 미북·북일관계는 거의 진전되지 않았고, 북중관계는 고위급 방문을 진행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보유 정책은 대외관계를 크게 제한했다.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핵 폐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인권 문제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켰다. 유엔은 6월에 북한 인권상황의 관찰과 기록, 국내외 정부·민간과 협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했고, 유엔총회에서 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강석주·리수용 등은 김정은의 ICC 제소를 막기 위한 외교활동을 진행했고,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국제기구·개별 국가·국제단체·활동가·탈북자 등을 가리지 않고 비난하거나 위협했다. 그러나 유엔이 요구한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5년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하고,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권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북관계는 북핵문제에 막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북한은 2015년 초부터 미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북한은 미국이 올해 한반도와 주변에서 연합군사연습을 임시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중지할 수 있다며 미북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일축했다. 미국은 북핵 협상을 재개하려면, 2.29 북미합의에서 규정한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포함한 핵개발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허용 등을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은 미북관계를 더 악화시켰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정부와 노동당 관리들, 산하단체·기관들을 포괄적 제재대상으로 삼은 대북제재 행정명령 13687호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튜브 인터뷰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지면 결국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키 리졸브, 을지프리트덤가디언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겨냥해서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조성하는 무모한 모든 적대행위를 무조건 중지하라고 요구했고, 소니픽처스 해킹에 대응한 대북제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2015년 10월에 평화협정 회담을 제의함으로써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북한의 대화제의를 묵살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 의지가 없다고 보고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면서 대북압박을 지속했다.

북한은 외교적 출로를 북중관계에서 찾았다. 북중관계 개선이 대북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출구였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중국에 수차례 특사를 파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진핑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자국의 통제를 벗어난 북한에 대한 대북압박을 지속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북중관계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혈맹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일부 전략가들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했고, 한국과 밀착했다. 북한외교는 더욱 곤경에 빠졌다.

2015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대북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권력서열 5위인 류원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은과 류원산은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확대하고 모든 수준에서 교류를 증진해 양국 관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합의했다. 북한은 12월에 모란봉악단을 베이징에 보냈다.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은 김정은 방중의 사전작업이라는 분석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나 모란봉악단은 공연을 불과 3시간 앞두고 공연 내용에 대한 북중 간 이견 차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전격 철수했다. 모란봉악단 철수는 북중관계의 파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중관계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에 대한 이견 조차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약화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북러 협력을 진행했다. 그러나 북러관계는 미중 양국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고 실속도 없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은 러시아를 방문해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 협의했다. 북러관계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이 김 제1위원장의 승전 기념 행사 참석을 확인했다”고 밝힐 정도로 밀착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방러는 무산되었다. 북러 양국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일관계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북한은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으나 2015년 7월에 제출하기로 했던 일본인 납치자 특별조사 결과보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북한은 특별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연기해 줄 것을 일본에 통보했고, 일본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다.

북한은 2015년에 핵개발과 인권탄압을 지속함으로써 대외관계를 다각적·주동적으로 확대 발전하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했다.

나. 2016년 전망

북한은 제4차 핵실험으로 인행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받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관련국들과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한미 공조와 한중 협력 등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 5자회담을 통한 북핵 논의 등 다각적으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한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양자 차원의 제재 및 국제사회의 단합된 압력 조치들을 상호 추동하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제4차 핵실험의 충격이 수그러들고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에 관한 논의가 일단락되면, 북한은 핵개발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구하고, 중국의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를 막는 데 주력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군사위협 때문에 핵개발을 지속한다는 논리를 제기하면서 반미 전선을 더욱 강하게 부각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에게 6자회담과 미북대화 재개를 요구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임시 중단과 핵실험 잠정 중단에 관한 논의를 제안하고,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의 안전 환경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북대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2.29 북미합의에서 규정한 북핵 협상을 위한 3대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북한의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미국 하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한 대북제재강화법안을 통과시켜 대북 금융제재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은 중국정부가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를 실행하라고 주문할 것이다.

중국의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를 막기 위한 북한의 외교적 노력은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는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고, 대북 석유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 등 독자적 대북제재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중관계는 류원산 방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 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중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이 핵보유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에서 북중관계는 시진핑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다음의 3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핵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무시하면서 북중관계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더 이상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북한의 행동을 방관할 수 없다. 셋째, 중국정부는 자국 내의 북한 비판 여론을 대북정책에 반영해야한다. 그러므로 북한이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핵을 개발하는 조건에서 북중관계는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외교적으로 수세적 상황에 몰릴수록 대러 접근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북러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실익은 적다. 미중이 북러 관계 강화에 큰 관심이 없고, 러시아는 대규모 대북투자를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북러 경제협력은 한국정부의 투자를 받지 못하면 진전될 가능성이 낮다.

북일관계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북핵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깨고 독자적으로 북일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어렵다. 더구나 북일관계는 일본인 특별조사 결과보고서 문제로 인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한의 일본인 특별조사 결과보고서가 일본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북일관계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인권 문제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제4차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대북 인권압박을 강화하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엔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북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강하게 비난할 것이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올해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 만족해야할 것이다.

- 오경섭 연구관리본부 부연구위원

6. 대남동향

가. 2015년 정세

김정은 정권 4년차, 북한 대남정책의 목표는 한국의 ‘공세적’ 통일준비를 차단하면서도 대화의 틀을 유지해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남북관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5년 남북은 8·25 합의를 통해 정치적 비방·중상 중지와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당국회담 개최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북한의 핵 고수와 대남 도발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여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2015년 북한 대남정책에 평가는 한마디로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아쉬웠다’로 정리할 수 있다. 3년 간 유훈통치를 마무리한 김정은은 해방 70주년을 맞아 통일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부각하고자 신년사에서 통일강국 거론, 남북교류협력 추진 등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남다른 의지를 표명했다. 2014년 12월 한국 통일준비위원회의 남북당국회담 제안으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북한은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이라는 ‘더 나아간’ 제안과 함께 1월 초 국방위원회가 한미군사연습 중단 시 북핵실험 중단을 제의하는 등 대화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한국 정부의 원칙 및 한·미·일의 국제정세,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 등을 매개로 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복 정서 강화 등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했다. 3월 이후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대북전단 살포, 유엔인권사무소 개소 등에 반

발하며 대남 비방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는데, 이러한 도발은 결국 8월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이어져 남북관계의 파국은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로 격화되었다.

다행히 8월 한반도는 대결과 위협의 단계적 확대 속에서도 북한이 대화라는 정치적 퇴로를 제안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전격 8·25합의라는 대화국면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이 과정에서 확성기에 대한 취약성, 원칙 있는 대북정책 수용 등으로 체면을 구겼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합의이행과정에서 까칠한(difficult) 행태를 강화했다.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에는 일정한 성의를 보였으나,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여타 의제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면서 회담을 결렬시켰다. 물론 제1차 당국회담이 차후 협상을 위한 힘겨루기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지’와 ‘여운’은 남아있다.

한편, 2015년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정은식 도발과 협상방식’의 관행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핵실험·장거리로켓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은 이러한 고부담의 고강도 도발보다는 국지적·저강도 도발을 선택함으로써 정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세 차례의 핵실험으로 일정한 핵능력을 과시하였고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대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극한 갈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올해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건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 시험 등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였으나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 등 전략적 도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8월 도발 시에도 포격 원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저강도 도발방식을 택했다. 한국의 확고한 대북협상 가이드라인, 한미의 강력한 대응, 북한 도

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도발 강도를 조절한 것이다. 또한 8월 위기에서 북한은 극한 긴장을 조성했지만 동시에 고위급 접촉이라는 ‘정치적 퇴로’를 함께 준비한 것도 김정은 정권 초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김정은 집권 4년차,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남북협상방식이 정착되고 있다. 그간 남북 정부형태의 상이함으로 인해 협상상대에 대한 ‘격’ 문제로 회담이 좌절된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3년 6월 통일부장관, 대남비서 또는 조평통 서기국장 등의 격 논란으로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이 무산되었다. 8·25 합의과정에서는 이러한 격 논란을 피하고 합의의 ‘무계’를 더하고자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책임자인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통일부장관 대 북한의 총정치국장, 통전부장 등 소위 ‘2+2 회담’을 추진하였다. 또한 남북 간 ‘끝장 협상’이 새로 선보였다. 8월 회담에서는 2박 3일 총43시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1박 2일 총24시간, 제1차 남북당국회담은 1박 2일 총32시간(회담은 3시간) 동안 상부와의 협력 하에 회담을 계속했다. 절차와 형식보다는 내용과 결과를 우선시하는 회담관행이 형성된 것이다.

한국의 통일준비 노력을 체제통합, 흡수통일의 시각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북한은 민족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으로 이해되는 분단관리에 집중했다. 북한은 8월 15일부터 기존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를 사용해 남북협력, 통일준비에 어려움을 더했다. 또한 국가 대 국가 간 관계에 주력했던 외무성이 남북관계 관련 논평을 내거나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8·25합의 이후 북한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한 점이다. 특히, 북한은 8·25 합의 평가에서 ‘신뢰’나 ‘불신 해소’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극한 부정에서 다소 전향적 모습을 보였다.

남북교류협력은 8·25 합의 이전과 이후가 사뭇 달랐다. 북한은 8·25 합의 이전에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교류협력만을 허용했다. 이희호 여사 방북과 평양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가 등만 허용하고 6·15와 8·15 남북공동행사, 광주U대회,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는 부정적이었다.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8·25 합의 이후에는 이산가족상봉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승인했다. 특히, 남북노동자축구대회, 거레말큰 사전 편찬, 국회의원 개성 만월대 방문,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금강산 방북 등을 남북공동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당국회담은 여백과 여지를 남겨둔 채, 신년사에서 밝힌 ‘자주통일의 대통로’ 확보와 남북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은 2016년 과제로 넘어갔다.

나. 2016년 전망

2016년 대남정책의 목표도 2015년의 그것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명목적 목표로는 자주외의 대통로를 통한 통일강국 건설을 내세울 것이고, 실질적 목표로는 남북관계 주도적 운용으로 분단의 안정적 관리로 정리할 것이다. 5월 이전에는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제7차 당대회를 준비하는데 집중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당대회 성패와 연동하여 화전책을 선택적으로 배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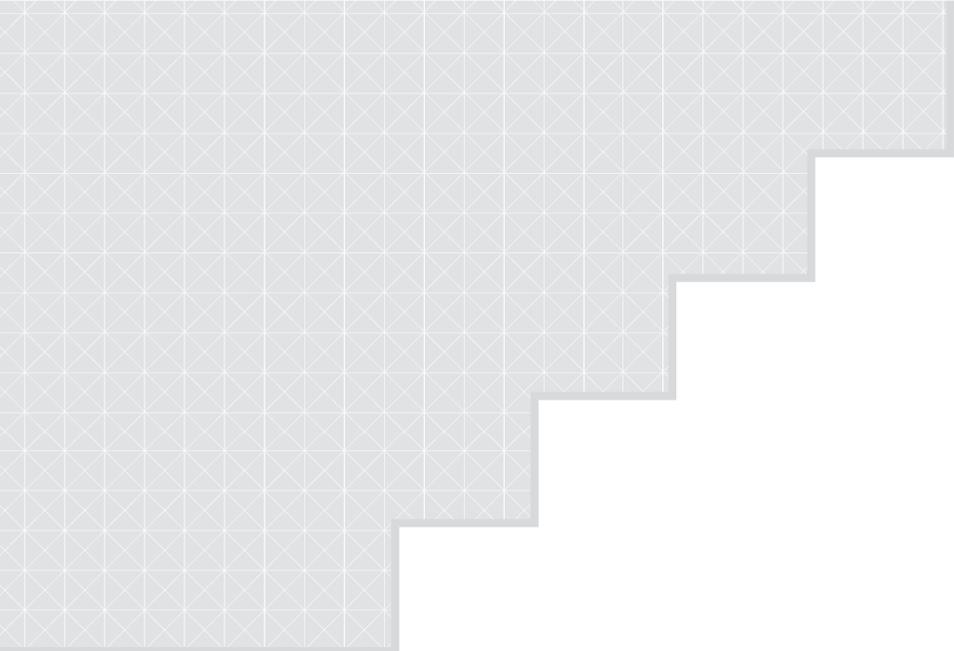
예전처럼 김정은 신년사에서는 명목적 목표를 과시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드러내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반기에는 북한이 대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당·국가기관·사회단체의 하층에서 조직을 정비하여 사회를 쇄신해야 하고 각종 노력동원을 실시하여 경제적 성취를 달성해야 하는 등 북한사회 전체가 제7차 당대회 준비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 5·24해제, 군사훈련 중단 등 현안이 고난도고 다수이므로 한두차례의 당국회담에서 일괄타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2016년 상반기에 당대회에 집중하기 위해 급격한 변화보다는 소극적 기조의 대남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를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장으로 활용하여 통일지도자로서의 품모를 과시하려 할 것이다. 먼저, 남북이 서로 폐지하라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상대되는 당규약 전문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 명분상으로는 민족화해를 자랑하고 실제적으로는 한국의 통일준비에 저항하고 분단관리를 안정화하려는 의도다.

김정은은 하반기에 당대회 성패를 지켜보며 대남 강경 또는 유화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당대회까지 대내외적 자신감이 강화되면 남북관계에 보다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만약 당대회가 실패하거나 연기될 경우에는 내부 체제정비에 더 집중하면서 대남·대외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MDL이나 NLL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적 통합효과, 대외적 부정효과,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발의 수준이 정해질 것이다.

- 김갑식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Ⅲ

남북한관계



1. 남북대화

가. 2015년 정세: 위기관리와 8·25 합의 도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및 통일준비론과 김정은정권의 병진노선이 대립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는 대화와 대결이 롤러코스트같이 교차하고 있다. 2015년 벽두가 밝으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2015년은 분단 70주년이자 광복 70주년으로 경색관계에 놓인 남북관계에서 벗어나서 통일을 향한 이정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었다. 또한 2015년에는 김정은체제 출범 4주년과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이해서 남북한 모두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2015년 남북관계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기간은 남북관계에 대한 탐색기(1월~2월)이다. 김정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고위급 접촉 재개와 부분별 회담 및 최고위급 회담의 개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렇지만 남북 회담을 위해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제도통일 추구 중단, 7·4 공동성명, 6·15 공동성언, 10·4 선언의 준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으로써 남북대화 재개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두 번째 기간은 대결과 위기의 기간(3월~8·25 합의 이전)이다. 2월 부터 4월까지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북한의 군사훈련과 대남군사위협, 유엔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6.23)에 대한 북한의 비난 등으로 남북관계의 해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4월 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4월 말 민간단체인 에이스경암이 신청한 15톤 규모의 대북비료지원이 허용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비료지원이 제공된 것이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2015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5·24 조치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북한은 2015년 5월 8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함으로써 핵무기 운송체계의 다양화 능력을 과시했다. 또한 북한은 남한 함정에 대해 조준타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5월 8일)했으며 며칠 뒤 야간 포사격을 실시하였다.

한편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며 6·15 공동선언 15주년이다. 이것을 계기로 남북한이 중단되었던 공동행사를 재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은 6·15 공동행사 및 8·15 공동행사의 주제 및 개최 장소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공동행사는 성사되지 못했다.

세 번째 기간은 8·25 합의이후 위기해소를 통한 대화의 시기이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시작으로 남북한은 전쟁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이르렀으나 벼랑끝에서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실마리를 찾았다. 8월 위기는 한반도의 분단과 대립의 현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했다. 분단이후 북한의 도발, 대화, 잠정적 타협, 도발 재개의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8월 위기는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과거 한반도위기와 비교할 때 8월 위기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8월 위기는 미중경쟁으로 대변되는 동북아질서 변화를 배경으로 발생했다. 미중의 힘겨루기가 복잡한 셈법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위기는 미중의 한반도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8월 위기는 김정은체제의 경제발전·핵 병진노선을 배경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목함지뢰 도발로 시작된 위기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남한의 안보의지를 시험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지형을 뒤흔들고자 한 배경에서 발생하였다.

8·25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협상과정을 보면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초가 보인다. 8·25 합의는 남북한이 군사적 대결을 어느 정도 극단 상황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험과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은 신중하게 저장도 도발을 감행했으며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지만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을 확대하는 모험을 하지는 않았다. 남한도 북한의 도발과 확전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였으나 상황악화가 초래할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북한은 위기 확대가 초래할 위험요소를 감안하여 전면 대결을 피하는 대신 대화와 타협의 방법을 택했다.

8·25 합의문은 당면 이슈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향후 상황관리, 향후 과제 등을 내용에 담았다. 합의문의 1항에서 후속 남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점은 위기해소를 위한 일회성 합의를 넘어 향후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합의문의 2항에서 북한이 지뢰폭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합의문의 3항과 4항은 위기해소를 위한 남북한의 동시 이행조치로 남한은 확성기방송을 중단하고 동시에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합의문의 5항과 6항은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8·25 합의에 따라 2015년 10월 하순(10.22~26)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전후하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음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걸림돌이 해소되었다.

8·25 합의이후 남한은 후속 남북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에게 3차례 제안하였다. 북한이 뒤늦게나마 이에 호응함으로써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개최(11.26)되었으며, 이후 개성에서 1차 남북당국회담이 개최(12.11-12)되었다. 1차 남북당국회담의 수석대표는 차관급이고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였다.

남북당국회담은 의제를 둘러싼 공방전이 되었다. 남한은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민생·환경·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DMZ)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 개성공단 3통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남한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재발방지, 관광객 신변안전, 재산권 회복 등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이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하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남측의 제안에 대해 북측은 2016년 3~4월 경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면 이산가족 상봉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8·25합의 이행을 위한 발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1차 남북 당국회담은 현안에 대한 남북한의 근본적 입장차이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했다. 남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다른 의제와 분리하여 접근하려는 분리접근입장을 보였다. 반면 북한은 금강산관광재개를 우선시하고 이를 이산가족문제와 연계하려는 연계접근방식을 보였다. 남북한의 접근방식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함으로써 향후 남북대화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나. 2016년 전망

2016년 새해가 밝으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8·25 합의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회담이 재개되고 남북관계 진전이 모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이러한 조짐스러운 낙관론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낙관론이 무색하게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후 5일만인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몇 가지 점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하게 하였다. 첫째, 북한이 7차 당대회 개최를 위해 평화로운 대외 환경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둘째, 북한 신년사가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도 북한이 올해 상반기 핵·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자제하고 대외적으로 평화적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했다. 셋째, 신년사에서 주민지지 확보를 위해 인민 생활향상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남북관계 개선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했다. 넷째, 핵문제 및 인권문제로 인해 국제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미 및 대일 접근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북대화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다섯째, 북한 신년사는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남북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1월 6일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북한은 1월 6일 수소탄 실험의 성공에 대해 이례적으로 긴 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 성명의 요지는 수소탄 실험 성공으로 핵 보유력 강화, 자위권 차원에서 수소탄 개발, 핵무기 선제 사용 및 관련 수단 기술 이전 배제, 경제·핵 병진노선 가속화로 요약된다. 특히 북한은 성명의 많은 부분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및 대북 핵억제전략에 대한 비난에 할애하고 핵무기 개발을 자위권에 의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제4차 핵실험이 북한의 주장대로 소형화된 수소탄 실험인지 아니면 증폭핵분열탄 실험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핵기술이

한 단계 향상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은 어떤 배경과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첫째, 북한은 핵능력의 고도화와 함께 경제생활 향상이라는 병진노선을 지속하고자 한다. 북한은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둘째, 제4차 핵실험은 집권 5년차에 접어든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7차 당대회 개최를 위한 업적 쌓기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대북압박정책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강화국면으로 돌입하였다. 유엔은 이미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하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가 있을 경우 유엔안보리가 자동개입하는 ‘트리거 조항(trigger)이 발효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 추가로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고 자산동결 대상 확대, 대북수출 금지 품목 확대 등 제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휴전선 일대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황성기 방송이 재개되었다.

8·25합의문의 3항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대북황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하였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한다고 판정됨에 따라 대북황성기 방송이 재개되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남한을 비난하는 대남전단을 다량으로 살포하였다.

8·25합의의 핵심 사항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8·25합의에 따라 진행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남북당국대화, 민간교류협력 확대 등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1회 이루어졌으나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남북차관급회담도 남북한의 입장차이로 말미암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황성기방송이 재개됨으로써 8·25합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다. 또한 2015년에 남북한간 민간분야에서 인적 교류가 확대되었으나 이러한 흐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사람들의 신분보호를 위해 통일부는 1월 11일 개성공단의 출입경 인원을 제한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만 남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한국민은 기존 800명에서 65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자차원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개별적 대북제재가 실시됨에 따라 한반도정세는 대북제재와 긴장고조의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유엔안보리의 제재수위를 관찰하면서 향후 대응방향을 가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 및 관련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여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월 말부터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군사적 동원태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사태전개에 따라 북한이 서해 NLL, 군사분계선 일대 등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이 각종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나 서해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북한이 추가로 SLBM이나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다. 북한은 평화적 우주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장거리로켓 발사를 정당화할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및 개별차원의 대북제재가 실시됨에 따라 한반도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유동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8·25 합의이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던 흐름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북한의 핵실험, 제재, 추가 도발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또 다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경제교류 등에서 조금씩 가능성을 탐색하던 것이 어렵게 되었다.

향후 이러한 제재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과거 사례를 보면 제재국면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한적이거나 관계진전을 위한 탐색전이 실시되어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에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대화를 위한 탐색전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산가족문제,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경제교류 등에서 제한적인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향후 추가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관계는 착잔속의 평화와 같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위기와 악순환의 사이클은 핵문제와 함께 한반도평화정착, 북한의 대미·일관계 정상화,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남북

경협, 인도적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일괄타결하는 방안이 마련될 까지 반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간에 얽히고설켜 있는 복잡한 다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과 주변국이 각각 대타협이 가능한 국내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일괄타결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내적 합의와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 박종철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2. 남북 교류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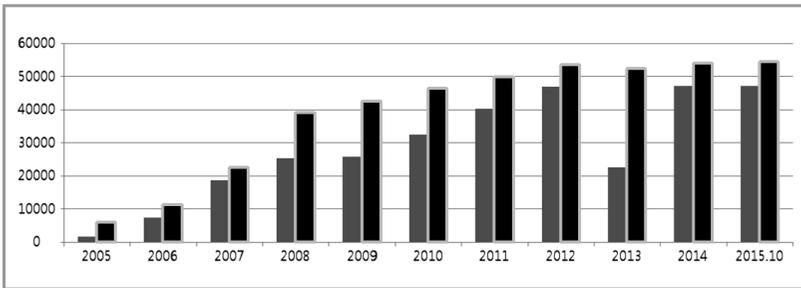
가. 경제 분야

(1) 2015년 정세

2015년 경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만큼은 2014년 4개월간의 조업중단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들어 생산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2015년 1~10월 총 생산액이 4억 7,089만 달러를 기록해 2014년 총 생산액 4억6,997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을 정도로 개성공단은 중단없는 생산량 증가세를 기록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 숫자도 2015년 10월 현재 5만4,357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400명 이상 증가했다 (도표 참조).

개성공단 생산액 및 북측 근로자 현황

(단위: 만 달러)



■ 생산액 ■ 북측 근로자

2010년 5·24 조치 시행에 따른 남북경협이 정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전반적 침체 국면 지속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이 제공하는 저임금 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섬유업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합의를 거쳐 개성공단의 규모와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문제가 개성공단의 추가 임금 인상 요구 가능성이다. 북한은 2015년 2월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 연 5% 인상 상한’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기업들은 정부의 ‘북한 주장 수용 불가’ 입장과 ‘임금 미지급시 태업 및 연장근무 거부’라는 북측 당국의 입장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8월 들어서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에 ‘임금 5% 인상 및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노임총액에 근속 수당 포함’ 등에 합의함으로써 임금 일방 인상 사태는 막을 내렸다. 12월에는 1년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1㎡당 0.64달러)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전히 남아있다. 임금 인상 발표에 앞서 북한이 2014년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북측이 개정했다고 발표한 규정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선 폐지 뿐만 아니라 월 최저임금 결정시 남측 관리위원회와의 합의절차 폐지와 남

측 관리위원회의 노무관리 권한 역할 약화와 같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임금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공동위원회는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11월 들어서도 한 때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한때 개성공단 출입제한을 통보하는 등 공단 운영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남북한은 8월 최저임금 인상 합의 당시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최저임금 추가인상 뿐만 아니라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도 포함한 포괄적 후속 협의를 벌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분기 1회 공동위 개최라는 기존 남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 운영의 제도화를 통해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남북한이 모두 원하는 교류협력의 방식일 수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입장에는 여전히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2016년 전망

2016년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경협에 대한 일반적 환경은 크게 나쁘지 않다.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생산 및 수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북한 지역의 저가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 기대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섬유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섬유 중소기업의 58.7%가 국내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개성공단에 원사, 원단, 의류봉제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전용 섬유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경우 참여 의향을 밝힌 업체는 조사대상 업체의 64.1%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으로써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은 장애물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북한의 기습적 핵실험 이후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 인원 최소 수준 조정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 무인기 작전 감행 등을 통해 비군사적 수준에서 상호 비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이처럼 남북관계, 특히 남북경협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북한은 19개 경제개발구 지정, 나선 경제무역지대 투자 계획 공포 등을 통해 외자 유치를 통한 대외개방형 경제개발 전략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4차 핵실험 이후 다자 및 양자 차원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어 북한의 외자유치 전략 이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논의를 한국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어 2016년의 남북경협 역시 당분간 정체, 또는 퇴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성기영 연구관리본부 부연구위원

나. 사회·문화교류분야

2015년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2010년 5·24조치 발효 이후 가장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 1월 1일 육성신년사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의 재개와 아울러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북한이 금년 6·15 15주년 기념일에 발표한 공화국정부성명은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최고의 입장표명 형식인 공화국정부성명을 통해 남북관계개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된 것은 2015년 8월의 남북합의 이후였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성사되었으며, 8·25남북합의 이후 민간분야의 사회문화교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을 보였다. 8·25남북합의 제 6항은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방북교류는 31차례로 2014년(21회)보다 48%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8·25남북합의 이후에 이루어졌다. 특히 10월에는 개성만일대 출토 유물전시회(개성),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평양),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금강산) 등 남북공동행사의 진행으로 남측 방북인원이 880명에 달했다.

가장 활발한 남북협력이 이루어진 분야는 종교계이다. 종교분야의 큰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종교대표들간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 졌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스님)회원 148명과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협회장 강지영) 회원 50명이 금강산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 모임’을 개최(11.9~10)했다. 남북의 종교인들은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민족화해와 단합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7개 종단의 수장의 방북은 2011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종교인 공동모임 및 공동기도회’ 이후 4년만이다.

불교계의 경우 10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이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과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금강산에서 봉행했다. 법회에는 자승스님과 지성스님 등 100여명의 남북 불교도가 참석했다.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장 춘광스님)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은 11월 3일 개성 오관산에 위치한 영통사에서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과 조불련 위원장 지성스님(강수린)을 포함하여 남북의 불교도 120명이 참석했다.

기독교계의 경우 한국 및 세계의 교회지도자 12명이 평양을 방문(10.23~30)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2006년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 개발협력을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도 협력하고 있다. NCCK와 WCC, 조그련

등은 2013년 제 10차 부산총회에서 세계교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14년 스위스에서 모임을 갖고 평양회의 개최를 추진해왔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10월 5일 평양에서 개최된 ‘평화통일 기원 미사’에 참석했다. 또한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의(위원장 김운회 주교) 소속 주교단은 분단 70년만에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12.1~4)했다. 방북단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귀경하는 입국장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의는 이르면 내년 봄 부활절 평양 장충성당 사제 파견 추진 등 매년 정기적 미사봉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과 협력하기로 했다.

10월 29일에는 평양에서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평양)가 개최되었다. 평양 5.1경기장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연합팀과 북측 직총 담배연합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연합팀과 북측 직총 수도건설팀 경기가 진행되었다.

2011년 중단된 개성만월대 발굴사업은 2014년 사업이 재개되었으며, 금년 10월 13일부터 약 한달 간 남북한에서 공동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개성 고려성균관에서 남북이 공동발굴한 만월대 유물을 동시에 전시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개성에서 열린 전시회 관람을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등 400여명의 남측인사가 방북했다.

2006년부터 중국과 평양, 개성, 금강산 등지에서 개최된 거래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는 2009년 12월 20차 편찬회의 이후 5·24 조치로 중단되었으나 2014년 7월 재개되었으며, 2015년에는 남북협력이 순조롭

게 진행되었다. 2015년 5월 중국 선양에서 23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가 개최(5.5~11)되어 홍중선 남측편찬위원장과 문영호 북측편찬위원장 등 34명의 남북편찬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를 통해 올림말 집필원고 21,669개를 검토하고, 이 중 15,727개의 원고에 대해 합의했다. 금강산에서 개최된 24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10.12~19)에서는 24,100여개 단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18,466개의 단어를 사전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12월에도 중국 다롄에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가 개최(12.7~13)되어 남북한 편찬원들간 사전에 수록할 어휘의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19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북한은 2015년 9월부터 그동안 꺼려왔던 남측 민간단체 단독 대북 인도지원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 및 산림·환경 등 ‘환경의 통로’분야 협력에서도 일정한 성과가 도출되었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북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며, 국내 민간단체 6곳의 온실 및 낙농협력사업에 14억 3천만원을 지원했다. 2015년 10월에는 산림관계자들이 방북하여 금강산 소나무 남북 공동방제작업(10.5~7)을 진행했으며, ‘전나무잎 응애’ 등 병해충 방지 기술 및 방제 물품을 전달했다. 금강산 소나무 방제와 관련하여 2016년 봄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2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 11일 개최된 남북 차관급 회담이 차기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종료되었으나 김정은 정권이 대남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정은 정권은 구조적인 경제위기의 해소 및 대내적인 안정화를 위해 외부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도 대남 및 대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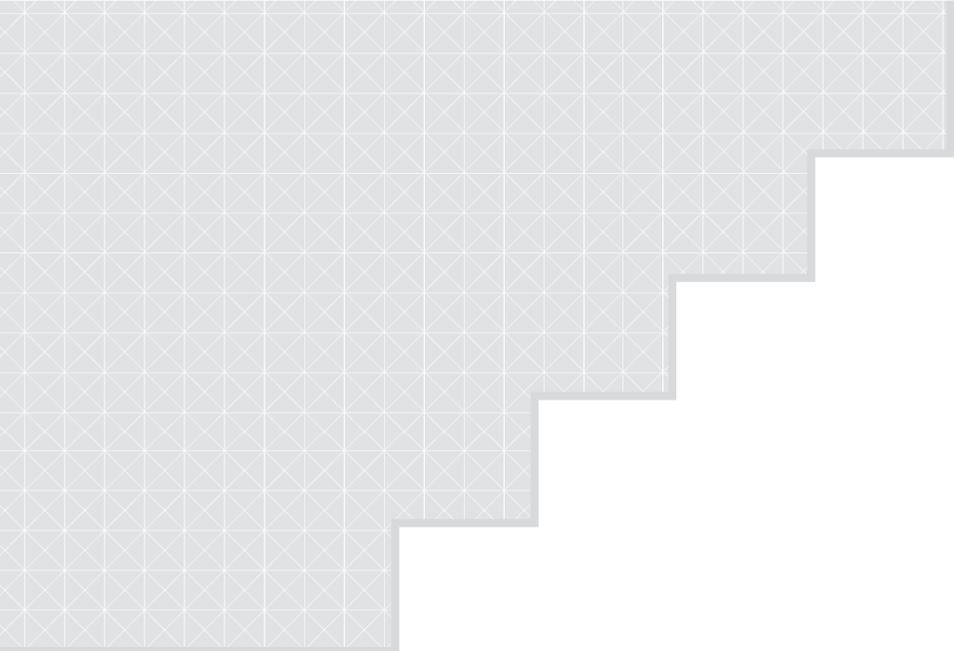
의 개선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또한 2016년 5월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도 김정은 정권에게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일정정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북한의 대남정책기조를 평가해 볼 때, 김정은 정권은 체제안정화를 위한 남북관계활용의 필요성 인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제7차 당대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의 활성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했다고 보기는 이르며, 신뢰에 기반을 둔 협상규범을 관습화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특히 2016년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국제적인 대북제재는 물론 남북관계의 전반적 경색도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국정부의 정책적 유연성의 여지를 극도로 축소시킴으로써 당분간 남북대화국면의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일정기간 냉각기간이 지날 경우 4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협상국면이 재개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 핵실험은 북핵문제의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은 핵실험 직후 고강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기 보다는 심리전에 대응하면서 남북교류의 재개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그러나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신뢰성 있는 조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당국이 남북교류를 재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16년 남

북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는 전적으로 북핵문제해결의 가시적 진전이
라는 전제조건 충족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 조한범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IV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1. 북한인권문제

가. 2015년 정세

2015년 전반적으로 북한 내부의 주민통제 및 사회통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월부터 국가안전보위부가 2014년 11월 신설한 '1080 상무'가 국내용 손전화의 검열 및 단속을 본격적으로 개시했으며, 2005년 비사회주의의 그루빠 척결을 명분으로 결성된 '109 상무'의 외부(해외)영상물 시청 및 소지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었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2015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식량농업기구(FAO)는 2015년 4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보고서(12.3)에서 올 초 가뭄으로 인한 봄 작황 감소와 여름 홍수로 인한 함경북도와 라선시 농지의 침수로 인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2014년보다 악화되었다고 평가하며,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3개 식량부족 국가 중 하나로 지정했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2015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했으며, 이는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증언이 일부 번복됨에 따라 더욱 가세되었다. 2015년 1월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신동혁씨 등)의 증언내용 오류에 대해 강력히 항의(1.22)했다. 리수용 외무상도 유엔 사무총장과 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를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2.4)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례적으로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 결의는 무효라 주장(3.3)했다. 북한은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리수용 외무상은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같은 시기 신흥철 부상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케냐,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를 순방하며 전 방위 접촉을 시도했다. 한편 북한은 인민보안부 교화소 당국자들과의 특별대담 형식으로 정치범수용소의 실체를 부정하는 인터뷰를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고, 범죄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교화소만 존재할 뿐이라 주장(6.3)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따라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2.24), 장애인의 TV출연(2.11), 김정은의 양로원 건설 현장시찰(3.6), 남녀평등권법을 선전(3.7)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체계화 되고 활발해졌으며,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은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에 관한 문제에 중점을 둔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3.18)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및 인권 위반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 목록에 추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3.27)했다. 인권이사회는 또한 동 결의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북한인권 패

널토론회를 다음 회기 중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 대표사무소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서울에 개설(6.23)됨에 따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문서화 및 모니터링이 강화되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의 개소를 맹비난하며 ‘초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위협(6.23)했으며, 이후에도 각종 담화와 성명, 매체의 논평 등을 통해 월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북한은 또한 북한인권 관련 인권보고서·인권백서의 출간과 국제심포지엄·포럼 등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했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2.10)한데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항의 서한(2.11)을 보냈으며,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14년 국가별 인권보고서’(6.25)에서 북한인권상황을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6.27)했다. 또한 통일연구원의 ‘2015년 북한인권백서’(7.1)에 대해 ‘극악무도한 도발’이라 반발하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겠다’고 위협(7.5)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유엔 총회에 제출(9.8)되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또한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북한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2015년도 보고서를 제출(9.25)했다. 한편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한 다루스만은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여 뿐 아니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문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10.29)했다. 제3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11.19)시켰으며, 유엔 총회는 본 회의에서 해당 결의를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채택(12.17)했다. 북한 당국자들에게 북한 주민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 결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을 검토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책임자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12.10)했다. 회의에 앞서 개별 주권국가의 인권문제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12.9)을 밝힌 중국은 논의 진행에 반대하며 절차투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는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2014년에 이어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향후 계획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를 포함한 유엔 총회 결의의 2년 연속 채택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의제 채택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책임성 규명을 중심으로 한 논의의 모멘텀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에는 북한 인권침해 실태 중 북한의 해외노동자의 인권 상황 및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가 부각되었다. 앞서 언급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북한인권 패널토론회가 제30차 인권이사회 회기 중 공식 일정으로 개최(9.21)되었으며, 납북자 유가족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국내외 활동이 이어졌다. 시민단체(NK워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인터뷰를 기초로 4월에 13건, 7월 3건의 청원서를 작성해, 북

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인권실태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including its Causes and its Consequences)에게 제출했다. 한편, 북한 해외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북한 당국에 의한 임금착취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란이 커지자, 카타르의 경우 북한 등 해외노동자의 지급방식 변경을 통한 임금보호체계를 도입(11.3)하는 등 관련 문제에 대한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협력 및 진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유엔 총회는 이번 결의(12.17)에 북한 당국에게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검토하라는 권고 내용을 포함했다.

2015년에는 국내외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 및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여야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중요 안건으로 두고 협의했으나, 연내처리는 결국 무산되었다. 해당 법안은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으로 타결될 여지가 남아있으나, 19대 국회에서의 통과여부를 속단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세부 항목의 이행을 중심으로 한 국내적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2016년 전망

2016년 북한 당국은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시책이 인민생활 향상과 결부되어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부정보 유입 및 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나,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 및 사회통제를 위한 단속 및 처벌 역시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 및 권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보다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3월 현장을 기반으로 한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의 첫 번째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 구상을 제안하는 다루스만의 마지막 보고서에 따라 관련 논의의 발전이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에도 유엔 인권이사회회의 북한인권 결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며, 다루스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유엔에서의 논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변이 없는 한 북한인권에 관한 논의는 유엔 제3위원회 및 총회에서의 결의 채택으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해당 논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끌고 가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는 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관련 결의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구가 예년처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은 이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적으로 연대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논의가 지속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들이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한 내부의 실상을 알림에 따라,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는 2015년 부각된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문제와 강제실종 및 납북자들에 관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

며, 이러한 문제들은 관련 국가들의 협력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문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의 보다 총체적 차원의 접근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의 궁극적 해결 방안으로 통일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이러한 논의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관련 문제를 공론화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임예준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 대북지원

가. 2015년 정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을 주요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영유아·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적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하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인도적 지원,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3대 통일기반 실천방안을 제시하였고 201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민생·환경·문화의 3대 통로 개설을 역설하였다. 또한 2015년 1월 9일 여성계와의 신년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을 비롯해 북한 주민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 사업을 우선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지원에 관한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바탕으로 통일부는 2015년 업무보고에서 여섯 가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을 제시하며 세부추진과제로는 ‘민생증진을 위한 『복합농촌단지』 조성’, ‘영유아 산모 통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확대’, ‘산림협력: 묘목·종자 지원, 병충해 방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당국차원의 지원은 물론 국내의 민간단체와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남한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5·24 조치 이후 대북지원사업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등 취약계층과 북한 주민의 실질 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의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도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총7,524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0.6% (약722억 원) 증가한 액수이고 이 가운데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은 180억 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240억 원이 책정되었다. 2015년 11월 기준, 대북 인도적 지원(무상지원)은 총33건이 이루어졌고 이는 2014년 8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한적십자사와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모금한 재원을 활용한 대북 지원도 2014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차원 지원액은 2015년 10월 현재 688만 달러(78억원) 상당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453만 달러(51억 원)와 2014년 506만 달러(54억원)를 넘어서는 액수이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지원 품목은 취약계층과 지역, 그리고 인도적 성격을 고려하여 의약품, 의료소모품, 묘목, 영양식, 분유, 농자재 등이 제공되었다.

정부는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 등 다양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22일 대북지원 실적이 없는 민간단체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북지원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고 지난 4월 27일에는 5·24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 에이스경암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하였으며 5월에는 유

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이 주관하는 북한 모자 보건사업의 백신 및 의약품 제공 프로젝트에 610만 달러(약72억3천만 원)를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보건·농업·축산 등 총 13개 단체, 17개 대북지원 사업에 총 23억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5년 9월 기준 21억8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월 5일에는 금강산 소나무 병충해 방제를 위해 전문 인력과 1억 3천만 원 상당의 방제약품을 지원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민간단체 아시아녹화기구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북한 산림녹화용 묘목과 종자를 반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경우에 따라 무산되기도 했는데 지난 2월 11일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분유 25톤을 지원하겠다는 통지문을 전달했으나 북한은 통지문을 수령하지도 않고 지원을 거부한 이유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2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소속 20여개 주요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 31명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민화협과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본격적 재개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였으나 북한은 11월 17일 돌연 ‘우리측 사정에 의해 평양 방문을 당분간 미뤘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보내와 방북이 무산되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약 3천만 달러로서 이는 2014년의 약 2천 800만 달러와 비슷한 액수이지만 2013년의 약 6천 2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고 2012년 1억 1천 3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약 1/3에 그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2016년 전망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2016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일정기간 남북관계의 냉각기를 거친 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대북 지원 분야는 그동안 북한의 식량사정이 개선되고 생활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존 대량의 쌀이나 비료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보다는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농업분야와 의료분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 된다.

정부는 2016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북한의 취약계층과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들을 포함시켰는데 우선 북한 모자보건 사업을 확대시켜 북한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복합농촌단지 사업과 산림복구, 녹화사업 등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북한 농촌의 자립기반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도 대북지원은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자재 생산 공장 설립 지원,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의약품 생산시설 지원 등과 같은 인프라 시설 지원과 남북한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산림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이 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5년 기뻐서 인하여 북한의 곡물 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2016년 북한의 식량 수급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긴급 구호 차원에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일정량의 쌀을 포함한 곡물 지원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와 지속을 주장해왔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에 따라 2016년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국제기구와 연계한 대북지원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 5월 정부가 5·24 조치 이후 중단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과의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허용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북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의 ‘피주기’ 논란에 다시 휩싸이지 않기 위해 사업의 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지역에 대한 사업 투명성 확보가 선결조건이 될 것이며 북한주민, 특히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의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

- 이우태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3. 북한이탈주민문제

가. 2015년 정세

2015년 한 해 한국사회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전년(2014년) 대비 100명 가량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각각 남성 305명, 여성 1,092명 등 총 1,397명을 기록한 데 비하여 2015년 12월 말 기준, 2015년 한 해 북한이탈주민 숫자는 각각 남성 251명, 여성 1,025명 등 총 1,276명을 기록하였다. 2011년 말,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2012년부터 급감한 한국사회 내 유입 북한이탈주민 숫자는 2012년과 2013년 연속 1,500명대를 유지(각각 1,502, 1,514명)했으나, 이마저도 2014년도에 100명 정도 감소했던 추세가 2015년에는 더 가속화된 것이다.

한국사회 내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급격한 유입 감소는 김정은 체제가 유지해 온 강력한 국경통제 및 사회통제 지속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북한주민의 탈북에 주로 사용되던 국경지대 손전화 사용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한되면서 탈북시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경경비 강화조치, 인신매매 등 탈북 관련 행위 처벌강화 등 다양한 통제수단의 확대로 도강비용 및 탈북비용이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강도 혜산을 비롯하여 함경북도 회령, 무산 등 주요 국경연선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여전히 국경연선 지대를 중심으로 탈북을 시도하고자 하는 잠재적 수요는 지속 및 증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정책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2013년 5월의 라오스 청소년 사태에 이어 2015년에는 어린 아기와 청소년이 포함된 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베트남에서 체포(10.22)되어 중국 공안에 넘겨져 심양에 도착(11.16)하는 등 북송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유엔을 비롯,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와 관련, 중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며 강제송환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는 2014년 발간된 COI 보고서 이후, 더욱 강력하게 중국의 자국 내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압박을 가해 왔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또한 고문방지협약을 이미 비준한 중국이 강제북송정책을 지속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11.17)하였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은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11.17)하고, 양국 간 협조를 통해 범죄인 소재 파악 및 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였다. 이는 특히, 러시아 내 파견된 북한 근로자 중 작업장을 이탈한 수천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집중적 단속 가능성을 의미하며, 탈북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 러시아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한편, 2015년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이 강력한 회의론에 부딪히는 한 해였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 증언의 구체성과 희귀성으로 인해 북한인권 침해사례 전파에 주요한 영향을 끼쳐 온 신동혁의 증언 일부가 위증인 것으로 판명(1.17)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특히, 북한은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1.21)를 통해 신동혁의 증언에 기초한 COI 보고서 자체도 거짓이라고 공격하였다. 전 COI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공세에 신중

하게 대응하였다. 마이클 커피 COI 위원장은 신동혁의 증언이 COI 보고서에 인용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부분에 불과하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북한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대변한다고 언급하였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북한이탈주민들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증언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재점검이 이루어졌다. 결국, 지나치게 예외적이거나 대중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내용의 경우, 여러번의 교차점검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북한인권 침해실태에 대한 증언 자체의 신뢰성을 잃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한국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남북하나재단은 ‘착한(着韓) 통일’이라는 표제 아래 착한출발, 착한힐링, 착한자립 등 다양한 계층의 북한이탈주민을 아우르고, 이들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를 아우르는 착한협업 모델을 통하여 정부 내외의 다양한 기관과 협조 및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사회 내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 숫자와 관련, 2016년에도 최근 3~4년간 표출된 감소추세에서 크게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체제의 핵·경제 병진노선 지속, 국경 및 사회통제 강화, 중국 및 러시아의 강제송환정책 지속 등 다양한 변수들은 북한 내 잠재적 북한이탈주민들이 지불해야 할 탈북비용의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에 이어 2015년에도 중국을 거쳐 동남아 국가를 향해 가던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탈북현상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러 북한이탈주민들은 최근 3~4년간 탈북환경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 결과 탈북 시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국경연선 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탈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2015년까지의 감소 추세를 중·장기적 추세로 보는 것은 여전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나. 2016년 전망

2016년 국제사회는 북한이탈주민 사안 관련, 더욱 참여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사안을 2년 연속 주요의제로 채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각각 수렴됨을 파악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인권 문제 중에서도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사안과 이를 둘러싼 각국의 정책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당국이 외화획득의 주요 원천으로 삼고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 역시 잠재적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들 중 상당수는 작업장을 이탈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단순한 경제적 이주민 혹은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일부 국가의 관점과 이들을 북한인권 사안의 연장으로 파악하는 서방 국가들의 관점이 더욱 참여하게 대립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안보리 내

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정책을 위시한 북한인권 이슈를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들 간 대립의 형태로 표출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신동혁 사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대한 회의론이 일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원천으로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적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북한이탈주민 출신 인권활동가들의 활발한 활동도 기대된다.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의 현실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한 해 다양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기가 국제사회에 출판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적으로 2016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성 및 청소년 등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정착지원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또한 통일기반 조성에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선도적 역할이 필수적임을 자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확대를 통해 대북·통일정책 실행에 있어 한국사회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역할 증대를 더욱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는 정부, 국회, 법조계, 언론계, 재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4. 이산가족문제

가. 2015년 정세

2014년 2월 제1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된 후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과 남북고위급 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정치적 이유를 거론하며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해오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1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의 고령화 문제를 강조하면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의 정례화, 서신 교환 등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협의를 조속히 갖자고 북측에 제안하였다. 8·15 경축사에서는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를 전향적인 자세로 풀어가 주길 촉구하고, 이산가족 전면 생사확인을 위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과 금강산면회소를 이용한 수시 만남을 제안하였다.

남과 북은 2015년 8월 4일 북한의 DMZ 지뢰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8·25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는 내용과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 초 가지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9월 7일부터 8일까지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해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상호 관심

사들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9월 9일 상봉후보자 인선위원회를 열어 고령자와 직계가족 우선으로 상봉후보자 500명을 선발하고, 본인의사 확인과 건강검진을 거쳐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를 250명으로 압축하였다. 남과 북은 9월 15일 상봉 후보자(우리 측 250명, 북한 측 200명)에 대한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였다. 9월 16일과 17일에는 시설 점검단이 금강산 지역을 방문하여 이산가족면회소, 외금강호텔, 금강산호텔 등 상봉행사에 사용되는 시설의 제반사항을 점검하였다. 9월 24일과 25일에는 시설개보수 인력이 방북하였다. 남과 북은 10월 5일 생사확인 회보서를 교환하였다. 우리 측은 북측이 의뢰한 200명 중 141명에 대해 재남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였으며(생존 121명, 사망 20명), 북측은 우리 측이 의뢰한 250명 중 176명에 대해 재북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였다(생존 120명, 사망 56명). 남과 북은 생사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상봉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10월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을 교환하였다. 10월 15일에는 상봉행사 선발대가 방북하여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북측과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2015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회차 행사를 통해 북측 96가족, 141명이 우리 측 가족 389명과 상봉하였으며,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회차 행사를 통해 우리 측 90가족, 254명이 북측 가족 188명과 상봉하였다. 이번 상봉행사에는 전시 남북자 1가족과 전후 남북자 1가족이 참여하였다. 이산가족 상봉단의 대부분은 80대 이상이었는데, 남측 상봉자 90명 중에선 90세 이상이 34명, 80세

이상이 46명이었고, 북측 상봉자 96명 중에선 70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5명이 80대였다.

8·25 합의 후속 대화 일환으로 2015년 12월 11일부터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 우리 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제안하였으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 측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이므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체 협의에 호응하지 않았다.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총 13만 808명이다. 이 중 6만 5,134명이 사망하고, 생존자 6만 5,674명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가 57퍼센트이다. 조만간 이산가족 신청자 중 사망자 수가 생존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위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제안한 이후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생존한 남측 이산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3만 여명이 생사확인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준비 차원의 내부 인프라 구축으로서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과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유전정보를 매칭·분석할 수 있는 이산가족 유전정보DB 구축 사업도 추진되었다.

나. 2016년 전망

2015년 12월 개최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차기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결렬되고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남북관계 전망이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다루며 부정적·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측이 이산가족 교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남북대화 재개 시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부분적·제한적 교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정부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만큼은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현실에서 일시적인 상봉행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을 위한 준비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생사확인이 이루어져야 이를 바탕으로 서신교환, 상봉 등의 교류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가족 문

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를 구하는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 도경옥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부록: 2015년 주요 사건일지

남북관계 일지

- 1.1 북한 신년사, ‘남북관계 대전환’, ‘최고위급 회담’, ‘중단된 고위급접촉 재개’ 언급
- 1.1 통일부장관, 북한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까운 시일 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 개최’ 언급
- 1.5 우리 민간단체(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전단 살포
- 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촉구하는 「남북 당국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 1.9 북한, 우리 국회의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 전달을 ‘상부의 지시’라며 접수 거부
- 1.12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발전·평화통일 기반 구축 의지 천명
- 1.23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24 합의 해제 주장
- 1.29 정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인구조사사업(130만 달러),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322억원) 등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 2.5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 비사를 공개한 前 대통령 회고록을 강하게 비난
- 2.7 북한, 신행 반환선 로켓 시험 발사
- 2.8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
- 2.11 북한, 한적의 인도주의 차원에서 분유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
- 2.23 정부, 동해상에서 구조(2.12)한 북한 주민(2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
- 2.24 북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70.35달러→74달러, 5.18%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
- 2.26 정부, 개성공단 관련 북측 주장 수용 불가 입장 표명 및 북한의 일방적 행태 중단 촉구, 개성공단 공동위 제6차 회의 개최(3.13)를 제안하는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전달하려했으나 북측이 수령 거부
- 3.2 북한, 단거리 미사일 2발 동해상으로 발사
- 3.2 정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 경고
- 3.10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 美대사 피습 관련 북한 연계설 비난 및 보수단체의 종북세력 규탄집회에 대해 ‘최고준엄과 공화국기를 모독했다며’ ‘피의 대가’ 등 위협
- 3.12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지대공미사일 발사(7기) 훈련 실시

- 3.13 정부, 북한이 남북간 합의를 무시하고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개회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 표명
- 3.14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 정중욱 부위원장 발언(흡수통일팀) 관련 통준위를 '흡수통일 모략기구', 통일준비는 '흡수통일 준비'라며 사죄 및 통준위 해체 주장
- 3.19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14명) 방북, 북측 관계자(박철수 북한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부총국장 등) 면담(개성),
- 3.22 북한, 제7차 세계물포럼(4.12~17) 초청 통지문 접수를 거부
- 3.24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자신들은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5.24 조치 해제를 요구
- 3.25 북한, 통준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남북이 각각 운영하는 보건시설 점검차)시 북한측 시설 참관을 거부
- 4.2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 우리 국민 역류를 간첩 사건으로 왜곡 주장하면서 '무자비한 처단' 위협
- 4.2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4.2 1발, 4.3 4발) 발사
- 4.10 북한 대표단, 광주U대회 대표단 회의(4.10~14) 참가를 위해 방남
- 4.15 우리 민간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살포
- 4.21 유진벨재단, 북한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방북(4.21~, 3주간)
- 4.22 개성공단 임금문제 관련 지급시한을 24일까지 연장
- 4.28 에이스경암 온실조성사업 관련 방북(4.28~5.2)
- 5.1 정부, 광복70주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 추진관련 정부입장」 발표
- 5.2 북한, 주원문(우리국민이자 美 영주권자/ 21, 뉴욕대 학생) 체포사실 공개('비법입북' 주장)
- 5.5 6·15공동행사를 위한 사전접촉(5.5~7, 심양), 겨레말큰사전편찬회의(5.5~11, 심양) 진행
- 5.8 광복70주년 남측 준비위 기자회견, 남북은 6·15/8·15 공동행사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6·15행사를 서울에서 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발표
- 5.13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철수를 위협
- 5.13 북한, 백령도·연평도에서 사격훈련 실시(5.13~15)
- 5.14 南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6·15 남북 공동행사 관련 추가 협의를 위해 5.19~20 개성 실무협의의 제의
- 5.15 북한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 대변인 담화, 6·15 행사 접촉결과 왜곡 공개
- 5.15 정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제6차 공동위 개회를 제안했으나 북측은 통지문 접수를 거부
- 5.20 북한, 5.21로 예정되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개성공단 방문을 철회
- 5.20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접견 계기 북한의 반 총장 방북 철회에

- 대한 유감 표명
- 5.22 남북은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관리위·입주기업·영업소대표 서명) 타결
- 5.24 'Women Cross DMZ' 대표단, 정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경
- 5.26 우리 민간단체(광복 70돌, 6·15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민간차원의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 관련북측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접촉하자고 다시 제안
- 6.1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 남측 준비위에 6·15 행사를 각자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자는 서신 발송
- 6.1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 진행(6.1~11.30)
- 6.2 북한, 개성공단 출입인원에 대한 메르스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열감지 카메라 지원 요청
- 6.5 북한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 대변인, 6·15 공동행사 무산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 6.5 정부, 개성공단 관련 북측이 요청한 메르스 검역장비(열감지 카메라 3대) 지원
- 6.12 북한, 우리 국민 억류 및 석방·송환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통지문의 접수를 거부
- 6.14 북한, KN-01 단거리 미사일 3발 동해상으로 발사
- 6.15 북한 군인 1명 군사분계선(화천 비무장지대) 넘어 귀순
- 6.15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 6.17 북한, 우리 국민 2명 판문점을 통해 송환
- 6.18 정부, 표류 북한 선박 1척·선원 5명(6.16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을 북측으로 송환
- 6.22 광주U대회 조직위, 북측이 UN 북한인권사무소 개설을 이유로 대회 불참을 통보(6.19)해 왔음을 밝히고, 정치적 이유로 불참한다는 데 유감 표명 및 북측 참가 요청
- 6.23 북한, 억류된 우리 국민(김국기, 최춘길)에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 6.24 통일부장관, 기자간담회 계기 '남북대화에 열린 자세로 북한의 변화만 기다리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가뭄피해 관련 지원 용의 표명
- 6.25 정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33억 600만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21억 7천200만원), 민간단체 대북 산림·환경 사업(30억원) 등 총 84억 7천800만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심의, 의결
- 6.29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북핵·북한문제 협의
- 6.30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방북 협의(개성)
- 7.2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대통령 실명 비난 및 정권 심판을 선동

- 7.9 북한 통지문,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제6차 회의의 7.16 개최를 제의
- 7.9 南 통지문, 북측 공동의 개최 제의에 동의
- 7.11 북한군(10여명) MDL 침범, 우리군은 경고사격 실시
- 7.14 북한, 억류중인 주원문씨 기자회견 진행
- 7.14 정부, 북한 선원 2명(7.4 동해상 구조, 귀순 의사를 표명한 3명 제외)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
- 7.16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상호 관심사항 설명 및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북측 관심사항에 대한 우리측의 유연한 입장에도 북측이 3통문제 개선 등에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합의 없이 회의 종료, 구체적 차기 회담 일자도 미정
- 7.17 정의화 국회의장,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제의
- 7.28 북한 금강산 소나무 병해충 실태 조사를 위한 산림전문가·현대아산 관계자 등 8명 방북(7.28~31)
- 7.30 북한, 억류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기자회견 실시(인민문화궁전), 북한 체제전복 음모·주민 유인납치행위 등 반복 적대행위를 인정했다고 주장
- 7.31 북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에 불참을 통보
- 8.4 DMZ에서 지뢰도발 사건 발생
- 8.4 현대아산 관계자 정몽헌 前 회장 추모식(금강산) 관련 방북
- 8.5 이희호 여사 방북(8.5~8)
- 8.7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8.5)에 따라 8.15부터 표준시간을 30분 늦춘 평양시간을 적용한다고 발표
- 8.14 북한 통지문, DMZ 지뢰 매설 부인
- 8.14 南 통지문,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
- 8.15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에 대화·협력의 길로 나와 민생향상,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
- 8.15 북한 표준시 변경(우리 표준시보다 30분 늦은 '평양시' 적용)
- 8.17 개성공단관리위(남)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북), 「개성공업지구 최저노임 및 노임계산 등에 관한 합의서」 체결
- 8.20 북한, 우리측 대북확성기를 향해 포격
- 8.20 북한 통지문, 48시간 내 심리전 방송 중지 및 수단 미철거시, 확전까지 예견한 강력한 군사행동 개시된다는 최후통첩을 전달
- 8.21 북한 통지문, MDL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최후통첩 시간까지 우리를 주시하겠다고 언급
- 8.21 북한 통지문, 김양건 당비서와 김관진 안보실장간 접촉 제의
- 8.22 북한 통지문,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비서가 접촉에 나오겠다고며 김관진 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나올 것을 요청
- 8.22 南 통지문, 북측 의견 수용 및 18:00 판문점 접촉 제의

- 8.22 북한 통지문, 우리 제의 수용
- 8.22 남북 고위당국자접촉(8.22~24) 개최,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수습,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계기 마련
- 8.28 南 통지문, 남북적십자실무접촉 9.7 개최 제의
- 8.29 북한 통지문, 우리측 남북적십자실무접촉 9.7 개최 제의에 동의
- 9.7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9.7~8, 판문점 '평화의 집'),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10.20~26 개최 및 가까운 시일 내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 9.1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 9.16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시설 점검 실시(9.16~17)
- 9.18 대한축구협회, 통일축구 행사 개최 논의 관련 방북(9.18~21, 평양, 정몽규 협회장 등 관계자 5명)
- 9.23 북한, 우리 국회 외통위 개성공단 방문을 북한인권법 문제로 거부
- 9.25 북한, 억류된 우리 국민(주원문)의 내외신 기자회견 진행(평양)
- 9.29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 종교인 평화대회 개최문제 관련 협의(개성, 북한 조선종교인협회)
- 9.30 민주·한국 노총,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관련 협의(개성,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 10.2 조계종, 북한 「조불련」과 「신계사 복원 8주년 남북합동법회」 행사 관련 협의(개성)
- 10.5 남북, 금강산 소나무 산림병해충 방제 공동 실시(10.5~7)
- 10.5 북한 통지문(북적 중앙위→한적), 북한 억류국민(주원문)을 오후 5시에 인도할 것을 통보
- 10.5 南 통지문(한적→북적 중앙위), 주원문씨를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우리측 시간 5시 30분에 관계자를 판문점으로 보내겠다고 통보
- 10.5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 국민 주원문씨 판문점을 통해 송환
- 10.8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종 명단 교환
- 10.12 겨례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회의 개최(10.12~19, 금강산)
- 10.14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10.14~11.6, 서울/10.15~11.15, 개성) 및 개성 학술토론회(10.15, 개성) 개최
- 10.14 북한 통지문(북한 적십자회 중앙위→대한적십자사), 중앙위 위원장에 리충복 전 적십자회 부위원장이 임명되었음을 통보
- 10.20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10.20~26, 금강산)
 - 1회차(10.20~22) : 북측 방문단(96명, 동반 45명)이 우리측 상봉단(389명) 상봉
 - 2회차(10.24~26) : 우리측 방문단(90명, 동반 164명)이 북측 상봉단(188명) 상봉

- 10.22 북한 우리민족끼리, 우리 국회의원·보좌관 PC해킹 부인
- 10.23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장충성당 남북공동미사 참석차 방북(10.23~27, 평양·묘향산)
- 10.24 우리 해군, 연평도 인근 서해 NLL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 경고사격
- 10.27 에이스경암 및 아시아녹화기구, 농자재·비료 대북지원
- 10.28 남북노동자축구대회 개최(10.28~31, 평양)
- 10.29 『2015 세계평화회의』 개최(통일부·통준위·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 공동주최)
- 10.30 정부, 예비접촉 제의 대북 통지문 발송하였으나 북한 접수 거부
- 11.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등 49명 개성 만월대 방북
- 11.4 북한 통지문(총국 → 관리위),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통보
- 11.4 정부, 북한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는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 서한을 전달하려했으나 북측이 수령 거부
- 11.5 북한,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개성공단출입제한 조치 철회
- 11.5 『히딩크재단』, 히딩크 드림필드(장애인 풋살경기장) 건립 협의 방북(11.5~7, 평양)
- 11.9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남북종교인모임』 계기 방북(11.9~10, 금강산)
- 11.13 통준위·통일부 공동주최,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 11.17 북한 통지문(북적 중앙위 → 한적), 북한 억류국민 이모씨를 오후 4시에 인도하겠다고 통보
- 11.17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 국민 이모씨 판문점을 통해 송환
- 11.20 북한 통지문(조평통 서기국 → 통일부),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1.26,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
- 11.24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위협
- 11.24 북한,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 명단 통보
- 11.26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개최(판문점 통일각)
- 11.26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관련 관리위-총국 협의
- 11.28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실패
- 11.30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5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성과 브리핑
- 12.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가톨릭 신자 교류, 평양 장충성당 보수, 북한과의 교류 협력 방안 등 협의(12.1~4, 평양)
- 12.2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對美 ‘평화협정 체결’ 주장 관련 조속한 호응 주장
- 12.4 우리측 주민 시신 1구, 판문점 통해 인수
- 12.7 제25차 겨례말큰사선 편찬회의 개최(12.7~13, 中다렌)
- 12.10 北 김정은, 새로 개건된 평천혁명사적지 시찰에서 핵보유국 발언 및 수소폭탄 언급

- 12.10 美中,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 주장에 대하여 북한 정권의 역내 불안정 야기 행위 및 정책에 대하여 우려 표명·비판
- 12.11 제1차 남북 당국회담 개최(12.11~12, 개성공업지구)
- 12.15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제1차 남북 당국회담 결렬은 남한 당국의 금강산 관광 재개협 의 회피 등 “대결정책이 초래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책임 전가
- 12.16 北 최고재판소, 임현수 목사에게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 언도
- 12.16 한미약품, 북한 평양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의약품 전달(10억원 규모)
- 12.20 北 우리민족끼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관광객의 신변안전 장치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금강산관광 신변 보장, 이미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때 최고수준 약속” 주장
- 12.21 정부, 북한 선전매체 ‘6년전 이미 최고수준 담보’ 주장(12.20)에 대해 “금강산관광 신변안전 조치, 당국간 논의할 사항”이라고 빈박(통일부 부대변인 정례브리핑)
- 12.23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남북여성 공동 문화행사(‘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 개최(개성)
- 12.24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
- 12.26 北 남조선인권대책협회, 『2015년 남조선인권유린조사 통보』 발표
- 12.28 북측 주민 3명 판문점 통해 송환
- 12.29 北 김양건(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사망
- 12.29 김양건 사망 관련 당국 차원의 조전 발송(대북통지문, 통일부 장관→통일전선부)

북한정세 일지

- 1.1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신년사 육성 발표
- 1.2 김정은, 평양유아원·애육원 방문 및 새해 원아들 축복
- 1.4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및 김정숙평양방직공장·평양양말공장 방문
- 1.7 김정은, 인민군 전선군단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구분대들의 비반총포사격경기대회 지도
북한, 미·북 간 대결국면 관련 대조선 제재조치 전면철회, 모든 적대행위 무조건 중지에 대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 발표
- 1.10 김정은, 평양시 버섯공장 현지지도
- 1.13 김정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시찰

- 1.16 김정은, 강동정밀기계공장 현지지도
- 1.18 김정은,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 현지지도
- 1.20 북한, 신년사 조국통일부문 과업 관철 위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
- 1.21 김정은, 류원신발공장 현지지도
- 1.24 김정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기·폭격기연대들의 비행전투훈련 지도
- 1.27 김정은, 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타격집단 장갑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 도하공격연습 조직·지도
- 1.30 김정은, 1월 28일 당·국가 경제기관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세포지구축산기지 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발표
- 1.31 김정은, 원산구두공장(한광상 당 부장 동행) 현지지도 및 적 해상목표에 대한 군중타격훈련 조직 지도
- 2.2 김정은, 인민무력부 기공구전사회장 참관
리수용 외무상, 주북 여러 나라(쿠바·시리아·스웨덴·독일·영국 등) 대사들과 담화
- 2.4 북한, 미국의 對北적대시정책에 대해 對美대응도수를 무한정 높여 미국과 상충할 용의가 없다는 국방위원회 성명 발표
- 2.5 김정은, 평양화학제품공장 현지지도
김정은, 김일성종합대학에 현대적 실험실습설비들 전달
- 2.7 김정은, 신형 반함선 로켓 시험발사(해군 제155군부대) 참관
- 2.8 김정은, 해군 제597군부대 관하 10월3일공장 현지지도 및 현대화과업 제시
북한, ‘정규군 창설일’(48.28) 67돌 기념 인민무력부 보고회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 2.11 김정은, 원산시 고아원 건설현장 시찰
- 2.13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서 창당 광복 70주년 경축 ‘첨단무장장비’ 개발 논의
- 2.15 김정은, 전용기 타고 건설현장 시찰
- 2.16 김정은, 광명성절(2.16, 김정일 생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2.19 김정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지도
- 2.21 김정은, 섬화력 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 지도
- 2.23 김정은 黨제1비서 지도下‘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진행
- 2.27 김정은, 과학기술전당 건설장 현지지도
김정은, 2월 26일 저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발표
- 2.28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새로 꾸린 근위부대관 시찰
- 3.3 김정은, 3월 2일 식수절 즈음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에서 전투비행사들과 식수

- 3.5 리수용 외무상, 3월 3일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복인권 결의안 채택무효 주장’ 연설
- 3.6 김정은, 양로원 건설현장 시찰 및 김여정(당 중앙위 본부장) 수행
- 3.9 김정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6군부대 시찰
- 3.11 북한, 러시아와 상호 합의에 따라 올해를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해’로 선포
- 3.12 김정은, 동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신도방어중대 시찰
- 3.14 김정은, 5월27일수산사업소 건설장 현지지도
북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 3.16 최태북 최고인민회의 의장, 주북 러시아 대사와 담화
- 3.18 김정은,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 현지지도
- 3.20 김정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비행장 타격 및 복구 훈련 지도
- 3.24 김정은,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어분사료공장 현지지도
- 3.27 김정은, 금산포 첫갈가공공장과 금산포 수산사업소 건설장(서해 능금도) 현지지도
- 3.31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월 30일 신임 駐北중국대사 ‘리진군’의 신임장 접수
- 4.4 김정은, 인민군 해군 제164군부대 시찰
- 4.8 김정은, 미사일부품 공장 시찰하며 제품의 주체화 강조
김정은, 평양약전기계공장방문
- 4.9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개최 및 국방위원 교체
- 4.11 김정은, 조총련에 2억 3,804만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전달
- 4.11 북한, 김정은 당 제1비서·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3주년 경축중앙보고대회 진행
- 4.12 김정은, 완공단계에 이른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 건설장 현지지도
- 4.13 인민군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전략군 장병들의 충성 예식,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
로두철 내각 부총리, 북-러 친선의 해 개막행사 참가차 北정부대표단 인솔하여 러시아 출국
- 4.14 북한, 김일성생일(태양절, 4.15) 103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4월 14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 4.15 김정은, 15일 0시 태양절 기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최태북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일성 생일 103주년 경축연회에서 연설
- 4.17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재일본조선인 대표단과 담화 및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대표단과 담화
로두철 내각 부총리, ‘북-러 친선의 해’ 개막행사 참가 후 귀국
- 4.18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와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동회의) 참석
- 4.19 김정은, 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성원 현

- 지 고무·격려
박봉주 내각 총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요해 및 평양 화장품
공장 방문
- 4.20 김정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 4.24 북한, 인민군창건 83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마다가스카르 대통령·르완다 수상·베
네수엘라 부대통령과 담화
- 4.26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에서 “군의 과업은 전투준비 완
성하는 것” 강조
- 4.28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북-국제의회 동맹간 관계 발전 문제 등 의견
교환 및 회담
- 5.1 박봉주 내각 총리, 평양 과학기술전당 건설장 현재요해 및 평양메기공장
개건 정형요해
- 5.3 김정은, 신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현지지도
- 5.6 북한, 전국상업부문 일꾼회의 개최
- 5.7 김정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 현지지도
- 5.8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러시아 ‘전승’ 70돌 경축행사 참가 및
중국주석·유엔사무총장 등 각국 국가·정부 수반들과 담화
- 5.9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발사 시험 진행 참관
김정은,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현지지도
김정은,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승’ 70돌 관련 축전 발송
- 5.11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80군부대 산하 7월18일 소목장과 안변양어장 현
지지도
- 5.15 김정은, 제810군부대 산하 신창양어장 현지지도
- 5.19 김정은, 대동강 자라공장 현지지도
- 5.23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과 낙산바
다연어양어사업소 현지지도
- 5.24 김정은, 제264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 5.26 김양건 당 중앙위 비서·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김용진 내각 부총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결성 60주년 중앙보고회 및 연회 참가
- 5.27 2015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를 금강산에서 진행
- 5.29 김정은, 인민군대에서 새로 꾸리고 있는 종합양묘장 현지지도
- 6.1 김정은,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현지지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북중인 독일-조선의원단과 담화
북한, ‘세계 금연의 날’ 행사, 6월 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6.2 박봉주 내각 총리, 함경남도의 화학·기계공업·수산부문 현지요해
- 6.6 김정은,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평양생물기술연구원 현지지도
박봉주 내각 총리, 과학기술전당 건설장 현지요해 및 도시 경영성 중앙

- 양묘장 방문
- 6.9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사적지 현지지도
- 6.12 김정은, 러시아 국경질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 발송
- 6.13 김정은, 고사포병군관학교 시찰
- 6.15 김정은, 인민군 해군부대들에 실전배비되는 신형 반함선 로켓 발사훈련 참관
- 김정은, 인민군 제2차 군단예술선전대 경연에 당선된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 박봉주, 봉화화학공장 현지요해 및 '에너지 절약형 생산공정 확립의 중요성' 등 강조
- 6.16 김정은, 해군함선구분대와 지상포구분대들의 야간해상화력타격 연습 참관
- 6.17 강석주 당 중앙위 비서, 주북 러시아 대사와 담화
- 6.18 김정은, 고사포병 사격경기 참관
- 북한,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 시작('64.6.19) 51돌 경축 중앙 보고대회 개최
- 6.20 북한,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 분구 조직
- 6.22 김정은, 여성 초음속전투기 비행사 조공향·립실 비행훈련 참관
- 6.25 김정은,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현지지도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러시아 국가회의의 의장과 회담 및 연방평의회 의장과 담화
- 6.26 강석주 당 중앙위 비서, 쿠바공산당대표단과 회담
- 7.3 김정은,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 현지지도
-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북도 농업부문사업 현지요해 및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방문
- 7.7 김정은,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현지지도
- 7.8 김정은, 김일성 사망 21돌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 7.11 김정은, 평양대경김기공공장 현지지도
- 7.13 박봉주 내각 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평양남새과학연구소·대동강 자라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현지요해
- 7.14 김정은, 락탕위생용품공장 현지지도
- 강석주 당 중앙위 비서, 유럽의 여러 정당 출신 정치인 대표단과 담화
- 7.18 북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7.19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 전국 각지에서 실시
- 7.20 김정은,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현지지도
- 김정은, 평양시·서성구역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 참가 및 후보자들과 담화
- 7.21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기존 문화유산보호법 폐기 및 민족유산보호

- 법 새로 채택 발표
- 7.22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경제개발구 부동산규정과 보험규정 채택
- 7.23 김정은,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 현지지도
- 7.26 김정은, 제4차 전국 노병대회 7월 25일 참가
북한, 정전협정체결 62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평양에서 진행
- 7.27 김정은, 7월 27일 0시 정전협정체결 62주년을 맞아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7.28 김정은, 정전협정일 맞아 한국전쟁 ‘열사묘’ 참배 및 중공군 묘 화환
- 7.30 김정은, 공군 전투비행술 경기대회에서 전용기 타고 사열
- 8.2 김정은, 신축 평양양로원 시찰
- 8.3 박봉주 내각총리,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해산·삼지연 넓은철길 건설정형 현지요해 및 삼지연습지구 여러 개건대상 시찰 및 대책수립
- 8.4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돌 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 및 농기계 전시장 시찰
- 8.7 북한, 조국해방 70돌을 맞으며 8월 5일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85)에 따라 표준시간 제정 결정
- 8.9 박봉주 내각총리,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 8.11 박봉주 내각총리, 황해남도 큰물 피해 실태 현지요해
- 8.13 김정은,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현지지도
- 8.14 북한, 8월 13일 백두산에서 조국해방 70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개막, 조국해방 7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 8.15 2015년 8월 15일 0시 30분을 기해 ‘평양시간 8월 15일 0시로 맞추게 된다’고 새 표준시 적용
김정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8월 15일 축전 교환
김정은, 8월 15일 0시 「광복」 70주년 즈음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8.17 김영남,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참관
- 8.18 북한-러시아, 무역·경제·과학기술협조위 임업분과위 제2차 회의 의정서 조인
- 8.24 북한, ‘선군절’ 55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4.24문화회관에서 진행
- 8.28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진행
- 9.4 김정은, 신의주측정계기공장 현지지도
- 9.3 박봉주 내각 총리, 과학기술전당 건설정형 현지요해
북한, 교육부문 원격교육체계 완비 선전
- 9.7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비서, 중국 항일전쟁승리 70주년 행사 참가
박봉주 내각 총리, 라선시 홍수 피해지역 현지 요해
- 9.8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행위에 관한 보고서 발표
김정은, 쿠바 국가대표단 접견 담화 및 리설주와 함께 쿠바 국가대표단을 환영하는 모란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 축하공연 관람

- 북한, 정권수립일(9·9) 6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
- 9.10 김정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 관람
- 9.14 김정은,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 현지도 및 감사 전달
- 9.15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으로 경제개발구 새금규정(11개 장, 72개 조 구성) 채택
- 북한-중국 정부사이의 ‘남양-도문 새 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체결
- 9.18 김정은, 라선시 피해복구전투 현지도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北창건’ 67주년 경축 재일본 조선인축하단과 담화
- 9.22 김정은, 군수공업부문 생활필수품 품평회장 현지도
- 9.24 리수용 외무상, 제70차 유엔총회 참가차 미국 방문
- 9.25 김정은, 새로 건설한 창광상점 현지도
- 9.28 김정은,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시찰
- 9.30 김정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박봉주 내각 총리와 함께 중국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장덕장 상무위원장에게 ‘중국 건립(10.1) 66주년 축전
- 리수용 외무상, ‘2015년 이후 개발의정’의 실현을 위한 유엔수뇌자회의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적극 합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10.1 김정은, 정성제약종합공장 현지도
- 리수용 외무상,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연설
- 10.3 김정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 참석 및 연설
- 10.4 김정은, 10월 3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을 경축하는 군민청년대합창공연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관람
- 10.6 김정은, 라선시 큰물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선물
- 김정은, 10월 4일 ‘당 창건(10.10) 70주년을 즈음하여 저작 ‘위대한 김일성·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발표
- 10.7 김정은, 쿠바 수상과 중국 국가 주석 등 각국 黨·국가수반들의 ‘北정권수립’ 67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
- 북한 당 중앙조·당 중앙군사조·국방조·최고인민회의 상임조·내각, 10월 7일 김정은에게 黨창건 70주년 즈음 공동명의 ‘축하문’ 전달
- 1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10.8), 함경북도 경원군 류다섬리 일부 지역에 ‘경원경제개발구’를 내오기로 결정
- 10.9 북한, ‘당 창건(10.10) 70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10월 9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북한, 노동당 대표단과 중공산당 대표단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 진행
- 10.10 북한, 당 창건 70주년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 진행

- 김정은, 10월 10일 0시(북한 시간) '당 창건'(10.10) 70주년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김정은, 10월 9일 중국 대표단(단장 : 류원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접견
- 김정은, 평양에서 「당 창건」 70주년 경축 청년전위들의 햇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 참석
- 10.13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알렉산드르 갈루쉬가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회담,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및 '북-러 경제무역협조 발전문제들' 토의
- 10.14 북한, 노동당 대표단·전 러시아정당 통일러시아 대표단 회담, 평양에서 진행 및 '상호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 토의
- 10.15 로두철 내각부총리, 러시아정부대표단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 10.16 중동·중방 北국가우주개발국, 국제우주연맹(IAF) 가입 보도
- 10.16 김정은, 인민군 제350군부대 시찰
- 10.19 김정은 부부, 당 창건 70주년 경축 공훈국가합창단·모란봉악단·청봉악단의 합동공연 관람
- 10.21 김정은,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 시찰
- 10.22 북한, 외무성 성명(10.17. 평화협정 체결 제안 관련)을 유엔안보리 '공식 문건 S-2015-799호'로 배포
- 10.23 김정은,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방문 및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 현지요해
- 북한, 조선노동당 창립 70돌 기념보고회 개최
- 10.25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김정은)명령 제00104호 주체104(2015)년 10월 24일 평영,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예술인들에게 군사칭호를 오려줄 데 대하여' 발표
- 10.28 김정은,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연면적 10만 6,600여㎡) 현지도
- 10.30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黨제7차 대회를 2016년 5월 초에 소집할 데 대하여 결정
- 10.31 김정은, 새로 개건된 평양메기공장 현지도
- 11.1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리수용 외무상·박봉주 내각총리, 러시아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위문 전문
- 11.2 북한, 인민문화궁전에서 노동신문 창간 7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11.3 김정은,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반항공부대들의 고사로켓 사격훈련 참관
- 북한,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식 진행
- 11.5 김정은, 4·25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꾼대회 참가 및 연설
- 11.8 리을설 인민군 원수, 94세 일기로 사망
- 김정은, 고 리을설 빈소 조문 및 조화 전달
- 11.11 제26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개막식,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
- 11.11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표단(오금철 부총참모장)과 러시아연방 무력 총

- 참모부 대표단(니콜라이 보그다놉스키 제1부총참모장)의 회담, 평양에서 진행
- 11.12 고 리을설 장례식,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
북한-러시아, 평양에서 「위험한 군사행동방지에 관한 협정」 조인 및 오금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니콜라이 보그다노프스키 러시아연방 무력 제1 부총참모장 서명
- 11.14 김정은, 새로 완공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현지지도
- 11.17 조선민주여성동맹, 인민문화궁전에서 창립 70주년 중앙보고회 진행
북한-러시아, 형사사건 상호협력조약 및 범죄 인도조약 체결
- 11.18 김정은,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 그물우리양어장 현지지도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5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평양에서 진행
- 11.19 북한, 사업검찰기관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
- 11.20 김정은,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 시운전 참관
- 11.21 북한,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 개최
- 11.23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 관하 8월25일 수산사업소 현지지도
북한, 주북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에게 ‘친선훈장 제1급’ 수여
- 11.24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37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 관람
- 11.25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관하 15호수산사업소 현지지도
- 11.27 김정은, 원산구두공장 현지지도
- 11.29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8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평양에서 진행
- 11.30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
- 12.1 김정은,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시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창당 14주년 통합러시아당 총이사회에 축전
- 12.3 김정은, 조선인민군122호 양묘장 현지지도
- 12.5 김정은,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 참석
- 12.9 북한 공훈국가합창단·모란봉악단, 중국 친선방문 공연차 평양 출발
리수용 외무상, 유엔 기후변화협약 고위급회의에서 연설
- 12.10 김정은, 새로 개건된 평천혁명사적지 현지지도
- 12.11 북한-러시아, 인민문화궁전에서 전력 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 12.12 김정은, 5월9일 메기공장 현지지도
- 12.13 북한, 인민문화궁전에서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꾼대회 개최
- 12.16 김정은, 삼천메기공장 현지지도 및 세계적 메기공장으로 전변시킬 데 대한 과업 지시

- 북한,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종신노역형 선고
- 12.17 김정은, 김정일 사망 4주기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 12.20 김정은, 1월18일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
- 12.24 김정은, 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와 제671대연합부대 사이의 쌍방실동 훈련 참관
- 12.29 김정은, 軍 제3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 참가
- 12.29 북한 당 중앙위 비서 김양진, 교통사고로 사망
- 북한,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30) 4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 12.30 김정은, 故 김양진 조문
- 12.31 북한, 故 김양진 장의식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

동북아정세 일지

- 1.1 북한, 신년사에서 병진노선·핵억지력 강조
- 1.5 한중, '제2차 외교·안보대화' 개최
- 1.8 한일, '제1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 1.18 한·미·일 6자회담 수석 대표회의 개최
- 1.23 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무원 부총리 접견
- 1.29 한중 제 13차 경제장관회의 개최
- 2.2 중국·러시아·인도 제3차 외교장관 회담 개최
- 2.4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북핵문제 논의
- 2.5 미 하원, 해킹 제재 조항 포함한 대북제재 강화법 발의
- 2.9 북한, 대미 강경 입장 천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5/90호' 배포
- 2.13 박근혜 대통령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을 접견
- 2.25 일본 육상자위대·미 해병대, 대규모 낙도 탈환 훈련 실시
- 3.2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
- 3.2 미러 외무장관, 제네바서 우크라 휴전 이행 방안 논의
- 북한, 동해안에 미사일 2발 발사
- 3.3 미국, 대러제재 연장 결정
- 3.6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 3.9 북한, 외국인 관광 재개, 중국 여행열차 첫 입북
- 3.12 북한, SA계열 지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
- 3,17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장관과 회동
- 3.21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

- 3.23 중국 공산당-일본 연립여당(자민·공명당), 교류재개 방침 확인
- 3.25 리진권 신임 주북 중국대사, 북한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 부임
- 3.28 미리, 우주정거장 2024년까지 연장 운영 합의
- 3.30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신임 주중대사로 부임
- 4.1 러시아와 미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모스크바에서 6자회담 재개 방안 논의
- 4.2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이버 공격 제재 행정명령 발동
- 4.7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외교청서 발간
- 4.10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
- 4.14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약 5년 만에 개최
- 4.15 AIIB, 한국 등 57개 창립회원국 확정
- 4.18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 미 국방부 청사서 개최
- 4.19~24 중일 참석한 아시아-아프리카(AA) 정상회의(일명 60주년 기념 반등회의) 개최
- 4.23 한중 제2차 개발협력 정책대화 개최
- 4.26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국 공식 방문
- 4.27 미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 4.28 미일, 공동비전 성명 발표
- 4.29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막
- 5.6 중국 군함, 러시아와 합동 훈련 차 흑해 첫 진입
- 5.8 푸틴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 5.9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 개최
- 5.13 중국,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표명한 외교백서 발간
- 5.15 '한·중·일 대테러 협의회' 3년 만에 개최
- 5.16~17 미중 전략경제대화(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방중)
- 5.23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 5.24 시진핑 주석, 일본 관광교류 방중단과 만남(방중단 대표자: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총무회장)
- 5.24~26 북일, 베이징서 일본인 납북자관련 비공식 협의 개최
- 5.25 중국 '일본군 위안부 문서' 국가급 기록유산 승격
- 5.26~27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 5.28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 개최(도쿄)
- 5.30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 6.1 한중 정상, FTA 정식서명에 친서교환
- 6.3 첫 한미 연합사단,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공식 출범
- 6.4 중일, 5년 만에 범죄인 인도조약 협상 재개
- 6.6 중일, 3년 만에 첫 재무장관 회담 개최
- 6.9 박근혜 대통령, 해리 해리스 미국 신임 태평양 사령관 접견

- 6.10 박근혜 대통령, 방미 연기
- 6.11 판창룡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카터 미국 국무장관 회담
- 6.15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 6.22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 교차 참석
- 6.23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논의
- 6.24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최
- 6.26 미국 국무부,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북한 인권 "세계 최악" 평가
- 6.29 AIBB 협정문 서명식 개최, 사실상 공식 출범
- 7.6 일본 "조선인 강제 징용" 근대 산업시설 23곳 유네스코 등재
- 7.7 인도, 파키스탄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
- 7.12 한미, '탄저균 배달사고' 민·관·군 합동실무단 발족
- 7.16 중일 첫 고위급 정치대화 개최
- 7.20 일본,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담은 2015년도 방위백서 국무회의 의결
- 8.14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발표
- 8.19 미국·NATO, 러시아 겨냥한 냉전 후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 개최
- 8.22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쿠릴 4개 섬 중 하나인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방문
- 8.28 일본 정부, 독도 자료 열람 포털사이트 개설
- 9.2 한중 정상회담 개최(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 9.4 박근혜 대통령, 상하이 임시정부 재개관식 참석
- 9.18 미국, 시진핑 주석 방미 앞두고 중국에 도피사범 첫 송환(양진권)
- 9.19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본회의 통과
- 9.25 미중 정상회담 개최(유엔개발총회 참석 차 방문)
- 9.26 한미 정상회담 개최(유엔개발총회 참석 차 방문)
- 9.30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중국, 일본인 2명 간첩혐의 구속
- 10.1 미국 본토 사정권 미사일 탑재한 중국 핵잠수함 첫 순항
- 10.5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환태평양경제 동맹자협정(TPP) 협상을 타결
- 10.9 중국 류원산 정치국 상무위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회동
- 10.16 한미 정상회담 개최 북한·FTA이행·기후변화 논의(공식방문)
- 10.18 미국·일본·인도, 인도양서 8년 만에 연합훈련
- 10.27 미국 구축함 '라센' 중국 인공섬 12해리 내 첫 항해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 개최
- 11.1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박근혜 대통령, 아베 총리와 첫 정상회담
- 11.7 중국 대만 첫 양안 정상회담

- 11.11 정상회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첫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 11.14~16 G20 정상회의 개최(안탈리아, 터키)
- 11.16 푸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G20 회의장서 별도 양자회담 개최
- 11.17 북러, 형사사법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 11.25 한중 6자회담 수석 베이징 회동
- 11.26 미국, 대만에 18억 3천만 달러(한화 약 2조 1539억 원 상당) 어치의 무기 판매 발표
- 11.30 위안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비공개 양자 회동
- 12.3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 일본, 정보수집위성 4→10기로 확대
- 중국,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정보 유출 해커 검거
- 중국 공산당·일본 여당, 6년 만에 교류행사 재개
- 12.14 한중 해양경제협력 1차 회담 개최
- 12.15 중국, 한반도 담당 외교부 고위직에 조선족 쿵쉬안유 임명
- 12.19 중국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
- 12.20 한중 FTA 공식 발효
- 12.25 중국 주도 AIB 공식 출범
- 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
- 12.31 푸틴, '러시아 연방의 국가안보전략' 문서 서명

북한인권 일지

- 1.7 미국 부시센터, 북 인권 보고서 발표
- 1.20 외교통상위원회, 北 인권법 패스트트랙 추진 제동
- 1.21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4 북한, 유엔에 인권결의 무효화 요구 서한 발송
- 2.10 인권위원회, 자카르타에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2.12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출범
- 2.11 스웨덴 법원, 탈북 주장 소년 강제추방 잠정 중단
- 2.23 호주 연방의회, 북한인권 개선 결의안 첫 채택
- 2.24 탈북자들, 제네바 인권회의서 북한인권 참상 증언
- 3.10 FIFA, 166만 달러 대북지원 중단
- 3.12 영국, 2015년에도 북한을 인권우려국으로 지정
- 3.15 북한, 인권이사국 개별 방문
- 3.18 미국 의원, 국무부에 이산가족상봉 서한 전달
- 3.18 6·25전쟁 납북자 175명 추가로 총 3천805명

- 3.19 일본-EU,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 3.24 영국, COI보고서 1주년 기념 ‘북한 인권청문회’ 개최
- 3.26 스웨덴 이민국, 탈북 주장 소년 사건 재심사
- 3.27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 3.27 유엔, 북한의 약 20여만 명의 외국인 납치 행위 규탄
- 3.28 북한 외무성, 유엔 북한인권결의 비난
- 4.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폐년술라에서 북한인권 세미나 개최
- 4.27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 포함 촉구
- 4.30 북한, 유엔 주관 북한인권 행사 방해
- 5.12 유럽, 북한인권 개선 보고서 발표
- 5.13 북한, 선양에 장애인보호연맹 대표부 설치
- 5.19 미 상원, 대북 추가제재결의안 발의
- 5.24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협정 서명
- 5.26 장애인 탈북자, 오슬로 자유포럼서 북한인권 고발
- 6.8 G7 정상회의, 북한 핵 개발·인권유린 비난
- 6.15~19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브뤼셀 북한인권회의 참석
- 6.23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23일 서울 개소
- 6.26 북한인권단체, 유엔 서울사무소에 요덕수용소 수감자 명단 제출
- 6.30 북한,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입후보 전면 배격
- 7.2 유럽의회,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 및 행동방안 논의
- 7.5 북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에 반발
- 7.29 북한, 미국 국무부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 인신매매 최하등급 지정에 반발
- 7.28~8.1 북한, 터키 세계농인연맹 정기총회 첫 참관
- 8.19 탈북민간단체, 호주 연방의회 첫 북한인권 공청회 개최
- 9.6~9.10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한국 방문
- 9.9 박근혜 대통령, ‘2015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 한반도 통일·북핵·인권 문제 언급
- 9.20 북한, 남한 여야 북한인권법안 제정 추진에 반발
- 9.21 유엔,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 북한인권 패널 토론회 개최
- 10.5 북한 억류 한국 국적 미국 대학생 주원문씨 송환
- 10.18 북한, 유엔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재추진에 반발
- 10.22 반기문, ‘북한인권상황보고서’ 유엔총회에 제출
- 10.20~10.26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시
- 10.30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정식상정
- 11.11 북한인권 국제회의 ‘서울인권대화’ 개최
- 11.10~11.18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한
- 11.19 제70차 유엔총회, ‘ICC회부·책임자 처벌’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위원회 통과

-
- 11.23 북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부 유보조항 철회
 - 12.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 상황 논의
 - 12.10 중국·러시아, UN안보리 북한인권 논의에 반대 표명
 - 12.12 북한 외무성, 유엔안보리 북한인권 토의 규탄
 - 12.26 북한 ‘2015 남조선인권유린 조사통보’ 보고서 발표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근 외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외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연구보고서

2013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회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 협동연구총서 ■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근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 Study Series ■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종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법적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연례정보보고서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학술회의총서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기 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5 ~ 2016

